

기본연구 2002-11

# 북한 수산업 실태와 남북협력사업 발전방안

2002. 12

홍성걸·임경희



□ 보고서 집필 내역

- ◆ 연구책임자
  - 홍 성 겅 : 제1장~제6장
- ◆ 연구진
  - 임 경 희 : 제4장 제1절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 고 재 모 (협성대학교 교수)
- ◆ 김 운 근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실장)
- ◆ 노 병 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 ◆ 최 익 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 머 리 말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중요한 식량산업이며,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40%를 공급하는 중요한 1차 산업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수록 수산물의 소비수요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수산업의 여건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EEZ체제의 본격 도입에 따른 인접국간의 어업협정은 우리 어장을 축소시켰으며, 좁아진 어장에서 과도한 어선세력에 의한 남획은 자원상태를 악화시켜, 수산물의 공급조건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수록 수산물 소비는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수급상황 하에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북한 수산물의 반입과 수산부문 남북협력에 대해 정책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일부 어업인들은 북한측 어장이용, 양식업 합작진출, 유통가공업 투자 등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이를 추진하여 왔다. 더욱이 북한측 당국자는 남북한 당국자간 어업회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동해어장의 일부를 남측에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의욕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수산부문의 남북협력사업들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한다면 수산부문의 협력사업들은 중지된 상태에서 명목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경제논리에서 보면, 부존자원이 상이한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남북사업들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이는 양측의 상호이익의 창출을 제한하는 많은 요인들이 남북한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간의 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은 남측과 북측간의 협



력사업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된다. 북측은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남쪽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측은 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제고한 상호보완적인 협력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과거 10여년간 이루어졌던 수산부문 남북한 협력사업을 돌이켜 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측과 북측이 협력사업에 대한 인식 격차를 명확하게 하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북측의 수산업 실태와 실정에 부합하는 발전적이면서 적절한 협력사업을 여건변화를 고려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 본 보고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홍성걸 연구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오순택 초청연구위원, 임경희 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02년 12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長 李 廷 旭



## 목 차

〈요 약〉	i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제 2 장 북한의 수산업 관리체제와 어업현황	6
1. 북한의 수산업 관리체제	6
1) 수산업 관리기구 / 6	
2) 북한의 수산관련 법규 및 제도 / 11	
3) 수산업 생산정책 / 12	
2. 어장환경과 자원이용 현황	13
1) 어장 환경 / 13	
2) 자원이용 현황 / 17	
3. 어선 및 어구이용 현황	21
4. 수산물 양식업 현황	25
제 3 장 북한과 인접국간의 해양경계와 어업관계	28
1. 남한과 북한간의 어업경계	28
1) 어로한계선 / 28	
2) 특정해역 / 29	
3) 조업자율규제조치 / 31	
4) 서해5도 주변수역과 북방한계선 / 32	



2. 러시아·일본·중국과 북한간의 해양경계와 어업관계 .....36
  - 1) 러시아와 북한간의 해양경계 및 어업관계 / 36
  - 2) 일본과 북한간의 해양경계 및 어업관계 / 36
  - 3) 중국과 북한간의 해양경계 및 어업관계 / 38

#### 제 4 장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추진 실태 ————— 40

1. 남한의 수산물 수급 및 수입현황 .....40
  - 1) 수산물 수급현황 / 40
  - 2) 수산물의 수입현황 / 41
2.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현황 .....45
  - 1) 북한산 수산물의 반·출입 제도 / 45
  - 2)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현황 / 46
3. 민간부분 투자협력사업의 추진사례 .....50
  - 1) 북한 현지의 투자관련 제도 / 50
  - 2) 북한 현지투자사업의 실현사례 / 52
4. 남·북한 공동어로사업의 추진사례 .....54
  - 1) 민간기업의 공동어로사업 추진사례 / 54
  - 2) 어업인단체의 공동어로사업 추진사례 / 56
  - 3) 북측이 제안한 동해북부어장 공동어로사업 / 57

#### 제 5 장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발전방안 ————— 58

1. 북한의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 추진과 북한의 변화 .....58
  - 1)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58
  - 2)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 / 65
2. 남한의 수산부문 경제협력사업 추진방향 .....68
  - 1) 남한의 대북경제협력사업 기본방향 / 68



2)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 / 70	
3. 북한산 수산물 반입사업의 발전방안 .....	72
4. 민간부분 투자협력사업의 발전방안 .....	74
5. 남북한 공동어로사업의 발전방안 .....	78
1) 남북어업협력회담 추진 / 80	
2) 조업수역에 대한 어업자원조사 및 시험조업 실시 / 81	
3) 본격적인 조업 실시 및 협력사업 확대방안 강구 / 81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83

1. 북한의 수산업 관리체제와 어업현황 .....	84
2. 북한과 인접국간의 해양경계와 어업관계 .....	85
3.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과 문제점 .....	87
4.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발전방안 .....	89
5. 남북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	92

## 참고문헌 ..... 95

부록 I : 북한의 협력 관련 주요 법규 .....	100
부록 II : 남한의 협력 관련 주요 법규 .....	122



## 표 목 차

〈표 2-1〉	북한의 어업제도 개황 .....	11
〈표 2-2〉	동해 북한수역의 어종별 어기, 성어기, 수온 .....	14
〈표 2-3〉	서해 북한수역의 어종별 어기, 성어기, 수온 .....	15
〈표 2-4〉	북한의 해역별 주요어종 .....	18
〈표 2-5〉	남북한 연도별 수산물 생산량 .....	19
〈표 2-6〉	북한 동해안의 어류 및 패류 생산량 .....	20
〈표 2-7〉	북한의 대표적 동력어선의 현황 .....	22
〈표 2-8〉	동해 주요 어류 대상 어구 어법 .....	23
〈표 3-1〉	서해 5도의 주변수역의 도서별 어업현황 .....	30
〈표 4-1〉	수산물 수급동향 .....	41
〈표 4-2〉	국가별 수산물 수입실적 .....	42
〈표 4-3〉	품목별 수산물 수입실적 .....	43
〈표 4-4〉	북한으로부터의 수산물 반입실적 .....	47
〈표 4-5〉	제품 형태별 반입 수산물 .....	49
〈표 5-1〉	남한과 북한의 국민소득 추이 .....	59



## 그림 목 차

〈그림 2-1〉 북한의 수산행정조직 .....	7
〈그림 2-2〉 북한의 국영수산사무소의 조직 .....	8
〈그림 2-3〉 북한의 수산협동조합의 관리조직 .....	9
〈그림 2-4〉 한국근해의 해구구분 및 수심도 .....	16
〈그림 2-5〉 한반도 근해의 표층 해류도 .....	16
〈그림 3-1〉 동해에서의 북한·러시아·일본간의 어업수역도 .....	37
〈그림 4-1〉 남북한간 수산물 반입 추이 .....	48
〈그림 4-2〉 투자관련 법령체계도 .....	52
〈그림 5-1〉 북한의 대외무역추이 .....	60



## <요 약>

### 제1장 서론

#### ○ 연구의 필요성

- 2001년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남한과 북한은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적 여건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왔음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한당국이 ‘남북당국자간 어업협력 회담’을 제의하였고, 남측에 동해어장의 일부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수산부문에 있어 실행가능한 남북협력사업을 정리해 보면, ①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② 북한내 생산 및 유통시설 합작투자, ③ 북한측어장 입어사업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 품목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가격과 남측의 시장가격이 가격차이를 갖고 있고, 남한내 수산물 공급부족이 예상되므로 시장교란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내 생산 및 유통시설의 합작투자 사업들은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사업외비용 지출이 크게 발생한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북한 현지투자사업은 반입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문제 등과 보완성을 갖기 때문에 사업진전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음
- 북한내 어장의 공동 입어사업도 북한 국내와 직접 접촉을 갖지 않는 해양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적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음. 또한 북한의 체제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이 추진이 가능할 것임
- 남북수산협력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존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남북협력사업의 한계
  -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자립경제를 기본으로 대외경제협력을 보완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입장임. 북측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지도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어떠한 정책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남북한간의 수산물 교역과 수산부문의 협력사업들은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으며, 사업외비용의 지출비중이 크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업 추진이 오히려 위축되는 상황에 있음
- 연구의 목적
  - 지금까지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어 온 남북협력사업을 검토·분석하여 수산부문에 있어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협력사업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이를 인식하고 남측과 북측이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약조건과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의 도출이 요구됨
  - 변화된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남북협력사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체계화 속에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구명하여, 협력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논리개발이 요구됨
  -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남북한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정리하였음. 따라서 정부 정책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역할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업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2장 북한의 수산업관리체제와 어업 현황

### 1. 북한의 수산업 관리체제

- 수산업 관리기구
  - 북한의 수산업 생산단위는 2개로 대별됨. 하나는 「국영수산사업소」와 그 계통작업반이며, 다른 것은 수산협동조합과 그 계통작업반임. 개별 어업자는 생산에 아무런 독자성이 없는 두 생산기관의 작업반원으로



이는 우리의 임금노동자의 지위로 존재함.

- 행정 계통조직상으로 「정무원→수산위원회→수산부→도 수산관리국→국영수산사업」으로 연결되며, 다른 계통으로 「정무원→수산위원회→협동수산지도총국→도 협동수산경리위원회→시·군 수산협동조합이사회→수산협동조합」으로 연결됨

#### ○ 북한의 수산관련 법규 및 제도

- 북한의 수산업관리법규는 i) 어업에관한규정(1949), ii) 양식업에 대한 내각과 중앙상무위원회의 공동결정(1958), iii) 수산기업소규정(1947), iv) 수산제품검사에관한규정(1940)의 4개 기본체계를 구성함.
- 이외에도 최고권력자와 노동당의 강령과 교시 등이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초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들은 명령형식을 통해 수시로 실천방안들이 수립되기도 함
- 1995년 1월 최고인민위원회가 수산업 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수산업법을 제정·공포하고, 1997년에는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수산업 관리에 관한 법체계가 혁신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추정됨. 수산부는 금어구와 금어기의 설정, 망목의 크기와 어법의 규제, 해양오염의 방지, 수산자원의 번식을 위한 배양장 건설 등에 관한 다수의 부령을 제정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음

#### ○ 수산업 생산정책

- 북한은 수산업을 식량을 보충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된 공급원으로, 북한경제에 있어 중요한 외화획득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재원의 조달, 계획추진의 차질 등으로 정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 어장환경과 자원이용 현황

#### ○ 어장 환경

- 북한이 관할하는 바다는 동해와 서해로 완전 분리되어 연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장환경과 수산생물의 분포도 상이함

- 동해의 주요어종은 냉수성으로 명태, 청어, 가자미, 은어 등을 들 수 있으며, 온수성으로는 정어리, 멸치, 꽁치, 학꽁치가 대표적임. 서해는 대구, 갈치, 삼치, 전어, 도미류, 가자미, 홍어뿐 아니라, 김과 미역 등 해조류와 바지락, 굴, 새조개 등 패류도 많이 서식함
- 내수면에서 양식되는 어종은 북한산잉어, 중국계잉어, 무지개송어, 송어 등 20여종에 이르고 있음

#### ○ 자원이용 현황

- 북한자료에 따르면 어업의 대상이 되는 유용수산동식물은 어류 75종 패류 20종 해조류 15종 기타 10여종으로 총120종으로 추정됨
- 1990년 후반부터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1960년대 수준을 밑도는 63만톤에 머물러 남쪽의 20%에 불과함. 이는 명태와 정어리의 자원이 감소하였고 경제난으로 유류 및 어업자재가 부족하여 어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됨

### 3. 어선 및 어구이용 현황

#### ○ 어선 이용 현황

- 북한의 어선관리는 일반 동력어선들은 국가해사국 해사감독처에서, 무동력어선은 안전국 국토처에서 등록과 감독관리를 맡고 있음. 어선의 입출항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모든 어선들은 어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조업이 가능함. 무동력선도 철저한 통제를 시행함
- 모든 선박에 대해 도, 종류, 소속부서, 소유기관별로 번호와 약자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붙여 선박명칭만 보면 선박의 종류와 소속부서 그리고 기관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있음
- 북한의 어선은 크게 무동력 어선과 동력어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안어장에서 이용되는 무동력선은 대부분 목선으로 쪽배, 전마선, 범선으로 구분되고, 동력선은 주로 철선으로 15마력 4톤정도에서 대형어선까지 있다고 함. 동력어선은 1,500 여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유류부족과 함께 정비불량, 부품부족, 기관고장 등으로 실제 조업이 가능한 어선수는 400여척에 불과함
- 어구 이용 현황
  - 북한에서 사용되는 어구는 80% 이상이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어망은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함
  - 가장 중요한 어구어법은 트롤며, 규모는 크지 않으나 통발, 주목망, 안강망, 정치망 등이 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연안어류는 정치망형태의 덩장어법으로 잡고 있을 것으로 추측됨. 전마선 또는 범선을 사용하여 인력으로 양망이 가능하므로 연료부족이 심각한 북한에서 연안어업의 상당 부분이 덩장어법에 의존함
  - 공치를 대상으로 흘림그물(유자망), 가자미류를 대상으로 겹자망(2·3중자망), 명태 자망과 주낙(연승)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어류 이외에도 오징어 채낚기, 게·새우 통발어업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함
  - 서해는 조기를 대상으로 하는 안강망어업이 성행하였으나 자원고갈과 경제사정으로 한 조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4. 수산물 양식업 현황

- 수산양식 현황
  - 북한은 양식업을 어로어업 및 가공업과 함께 3대 중요부문으로 인식하여 정책적으로 중점 지원을 하였음.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는 국가기밀로 다루어지므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사료를 공급하지 않고 자연 생산력을 이용하는 해조류와 패류 등의 양식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미역, 김 등의 해조류와 바지락, 굴 등의 패류가 주로 양식되고 있음
  - 어류 양식에 있어서도 내수면의 저수지나 하천수에서 자연생산력을 이용한 잉어, 붕어 양식과 사료를 공급하지 않는 초어, 백련 등의 양식이 시행되고 있음
  - 남한에 비해 겨울이 길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 잉어, 붕



- 어, 참돔 등의 온수성 어류는 남쪽보다는 불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대적으로 무지개송어, 연어 등 냉수성 어류는 여름철에도 지하수 등을 이용하면 연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임
- 내수면의 수질 환경은 오염원이 적어 남한보다 상당히 양호할 것임

### 제3장 북한과 인접국간의 해양경계와 어업관계

#### 1. 남한과 북한간의 어업경계

- 어로한계선
  - 북한과 인접한 경계어장에서 어선피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4년 농림부예규 제32호로 어로한계선을 설정하였음. 어로한계선은 법적으로 우리 어선의 어업활동에 대한 자위적 통제선의 성격을 가짐
- 특정해역
  - 국방상 목적과 어선납북방지 및 안전조업을 목적으로 1968년 11월 동해와 서해에서 어로한계선 남쪽수역의 일정 범위에 대해 특정해역을 설정함. 1972년 선박안전조업규칙 제5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특정해역은 우리 정부가 한국어선의 어업활동에 대한 자위적 통제조치를 시행하는 수역임
- 조업자율규제조치
  - 1975년 중국과의 어업분쟁 및 피납방지를 목적으로 황해 일·중 어업협정선에서 약 35해리 완충수역을 두는 조업자율규제선을 설정함. 자율규제조치인 만큼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됨
- 서해5도 주변수역과 북방한계선
  - 서해 5도란 황해도의 대동만 입구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그리고 해주만 입구의 연평도, 우도를 말함. 휴전협정에는 동해와 서해의 양측 관할권을 구획하는 해양경계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 유엔군측은



1953년 서해 5도로부터 북쪽으로 북한 점령지역과의 대략적인 중간선에 해당되는 북방한계선(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북한측에 통고했으나, 당시 북한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음. 그 후 북방한계선은 사실상의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역할을 하였음

## 2. 러시아·일본·중국과 북한간의 해양경계와 어업관계

### ○ 러시아와 북한간의 관계

- 북한은 구소련과 1985년 ‘영해경계획정에관한협정’을 체결하여 두만강 하구의 경계획정을 한 바 있음. 1986년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0년에는 1985년 ‘영해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계를 공식화함

### ○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

- 북한이 1977년 동해와 황해에 배타적경제수역과 50해리 군사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이를 시행함. 이에 따라 일본은 조업하여 온 기존어장의 확보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음
- 협상의 결과 1977년 북한 조선동해수산협동연맹과 일본 일조어업협의회간 민간차원의 ‘일·조 어업협력에 관한 잠정합의서’를 체결함. 이에 따라 제1차에서 1991년 12월 제7차까지 잠정합의가 계속되어옴. 그러나 1994년 1월 이후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었으며, 현재까지 양국간 어업협력관계가 중단된 상황으로 해석됨

### ○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

- 중국과 북한간의 어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황해에서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중간선으로 추정되는 ‘바다 반분선으로 경계를 정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내용을 밝힌 바는 없으며, 수역전체를 군사수역으로 선포하고 있음



## 제4장 남북 수산협력사업의 추진 실태

### 1. 남한의 수산물 수급 및 수입현황

#### ○ 수산물 수급현황

- 2000년에는 총 공급량 455만 톤 중 수입수산물이 약 31%를 차지함.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95년에 46kg까지 증가했으나 IMF 경제위기 하에서 1998년에는 35kg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 수출입의 추이를 보면, 수출은 1990년대에 들어 정체하고 있는 반면 수입이 급증해 2000년에는 수출이 1411백만 달러, 수입이 1410백만 달러로 균형을 보이다가 2001년부터는 수입이 초과되는 상태임

#### ○ 수산물 수입현황

- 국가별 수입실적을 보면, 2000년 현재 중국이 487백만 달러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183백만 달러로 13%, 미국이 145백만 달러로 10.3%, 러시아가 125백만 달러로 8.8%이며, 상위 4개국이 수산물수입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2.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현황

#### ○ 북한산 수산물의 반·출입 제도

- 교역업체가 남북한 수산물 교역을 위해서는 거래 협의를 위한 의사교환을 북한측과 직접 행하든지 혹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하든지 북한주민접촉이 필요하므로 북한주민접촉 승인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음
- 남북간을 이동하는 모든 물자는 그 소유자나, 원산지, 품목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반출입 승인을 요하며, 다만 포괄승인 품목에 한해서는 반출입 승인 없이도 세관통과가 가능함



○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현황

- 북한산 수산물의 연도별 반입실적을 보면, 반입이 시작된 1989년에는 17만 달러로 극히 적었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6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2000년에는 4,000만 달러를 상회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은 1996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24,633톤에 4,200만불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전체반입액 1억5천2백만불의 27%를 점유하는 수준임
- 북한 입장에서 남한이 일본에 이어 제2의 수출국임.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우리 수산물의 북한 반출은 미미한 수준임

### 3. 민간부문 투자협력사업의 추진사례

○ 북한 현지의 투자관련 제도

- 북한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협력사업은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으로 구분됨. ‘합영사업’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사업방식이며, ‘합작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단독 경영하는 방식과 남한이 단독 투자하여 단독 경영하는 방식임
-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는 모법인 "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투자기업의 형태에 따른 법규, 투자기업 운영에 관한 법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관한 법규 등 세 가지로 구분됨

○ 북한 현지투자사업의 실현사례

- 미흥식품

- 미흥식품은 중국 ‘미영기업유한공사’와 공동으로 북한 ‘조선철산주식회사’와 사업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어패류채취 및 수산물 가공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시작함. 1998년 3월 통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취득함
- 그러나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측의 파트너 교체로 인해 답보상태로서 별다른 사업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태영수산

- 태영수산은 참가리비 양식분야의 전문기업으로 1996년부터 남한측 대기업인 LG상사와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LG상사가 자본을 투자하고, 태영수산은 양식기술을 제공하였음.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사업의향서를 체결하여 북한은 어장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함
- 1997년 10월 14일 통일원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취득하고, 1998년 9월에 「라진수산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함.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음

#### 4. 남북한 공동어로사업의 추진 사례

○ 민간기업의 남북공동어로사업 추진사례

– (주)해주의 합작입어사업

- 남측의 해주(주)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의 ‘광명성총회사’를 사업파트너로 하여 북한의 서해수역에서 공동조업을 하여 어획물을 전량 반입하여 판매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함
- 그러나 북한내 조업구역이 서해안 군사분계선 이북의 연안이었으며 조업하고자 하는 어종이 회유성 어종으로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어 남측 어업인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부는 2000년 8월 16일로 사업승인을 불허하였음
- 2000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 안승유통의 북한 동해수역 붉은대게 조업 추진

- 안승유통에서 북한에 붉은대게잡이 어선 및 어구·장비 등을 제공하여, 붉은대게를 어획 반입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활용하는 사업계획을 3차례에 걸쳐 통일부에 신청을 하였음
- 붉은대게가 저가 및 무관세로 대량 국내에 반입될 경우 어가하락으로 인해 강원·경북 계통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통일부에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음



- 어업인단체의 공동어로사업 추진사례
  - 전국어민총연합회의 북한수역 입어 추진
    - 전국어민총연합회에서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파트너로 하여 북측이 어장을 제공하고 남측의 어선들이 지정된 북측어장에 입어하여 어획물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을 추진함
    - 그러나 동해 어업인의 반발 등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접촉승인 유보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추진하였음. 통일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서가 반려되었음.
  - 수협중앙회의 합작입어사업 추진
    - 남측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북측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공동으로 합영(또는 합작)회사를 설립 운영하되, 남측은 어선, 어구 자재 등을 제공하고 북측은 어장, 선원을 제공하여 북측수역에서 조업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함
    - 1998. 5. ~ 2000. 4. 까지 5차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 양측이 협의하였으나, 북측에서 선박 4~5척 및 운영기금을 우선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보장 불투명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음
- 북측이 제안한 동해북부어장 공동어로사업
  -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측은 동해북부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공식 제의함. 이에 남측은 북측제의에 많은 관심을 갖음
  - 그러나 어장의 정확한 위치와 조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동 어장의 경제성과 국내어업인의 조업용이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어장의 경제성과 조업의 용이성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제5장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발전 방안

### 1.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추진과 북한의 변화

- 1990년대 경제위기 상황
  -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내



면적한계와 자립경제노선의 추구에 따라 야기된 것임.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비효율성, 사회주의권 붕괴 등으로 후퇴를 거듭하여 왔음

-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도 1990년대 들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음

○ 1990년대 경제위기 해소 방향

- 김정일 세습체제가 정리되면서 경제회복 보다는 체제수호를 우선시하는 즉 기존의 북한식 계획경제와 자립경제를 고수하고 있음

- 김정일의 위기해소 방안은 강성대국 건설방식으로 군대를 장악하고, 군대강화 → 사상강화 → 경제강화의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왔음

○ 대외개방 정책 방향

- 북한은 경제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 관계를 이용해 왔음. 자립 경제에 바탕한 제한적 개방 경제의 추구임

-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하지 못한 것은 국내정치적 요인, 대외외교적 요인, 국내 내부적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음

○ 북한의 변화

- 김정일은 북한체제 내부결속을 강화하면서 이념과 체제는 변화되지 않고 있음.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대남정책에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음

-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우려, 집단 소유와 중앙통제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정책과 관리에 있어 방향전환을 모색함

- 대외무역에 있어 종래의 국가간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무역상사를 통해 기업간 거래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2001년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등 제정, 교역 확대를 준비함

## 2. 남한의 수산부문 경제협력사업의 추진방향

○ 대북정책의 기본 구도

- 최근 대북 정책은 포용정책을 표방하고 있음. 이는 7·4남북공동성명(1972), 유엔동시가입(1991), 남북기본합의서채택(1992) 등 과거정



부에서 추진된 정책들과 동일 맥락에서 추진되어 오는 정책임

○ 남측의 통일방안

- 남측은 자주와 평화 그리고 민주를 통일의 원칙에서 화해협력 → 남북 연합 → 통일국가의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기본방향

- 첫째, 남북한 수산분야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되 국내 생산어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함. 둘째,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후에 협력사업을 확대하여야 함. 셋째, 수산업의 특성상 정부차원에서 남북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함으로써 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것임

○ 남북경협에 관한 기본합의

- 2000년 2월 16일에 이루어진 ‘남북경협에 관한 기본합의’를 토대로, 민간협력의 활성화 유도하기 위해서 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시행될 때 수산분야의 협력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어업공동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가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 3. 북한산 수산물 반입사업의 발전방안

○ 기본방향

- 국내 수산물 수급상황을 보면, 어장축소에 따른 국내 생산의 감소와 수입자유화 그리고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수입이 총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은 부족한 수산물 공급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현지 집하 가공유통시설의 보완

- 수산물교역은 일정량 집하가 필요하고 집하지역내에 보관할 수 있는



물적 수단과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반입수산물은 양육시설과 가공 및 포장기술 등이 부족하여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를 갖고 있음

○ 유통관계자간의 인적교류 확대

- 수산물 반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물의 상품특성상 현물평가가 불가피함. 또한 수산물은 출하시기가 불규칙적이므로 구매자가 현지에 주재함이 필요함

○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격차 해소

- 수산물의 품질은 어획시기와 장소 그리고 선도유지를 위한 어획후 관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됨. 남북한간에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격차가 크게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 품질에 대한 인식 격차는 생산자의 기대가격과 거래되는 실제가격간의 격차를 야기하고 상호간에 신뢰감으로 연결됨. 따라서 이러한 마찰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출하되는 현지에서 품질확인이나 경쟁매매방식이 요구됨

○ 유통비용의 절감 대책 강구

- 북한산반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유통비용과 제반경비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반입확대를 위한 채산성과 관련하여 경비를 절감시키는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반입확대 기대 품목

- 반입의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으로는 명태, 복어, 가자미, 홍어 등의 어류와 가리비, 바지락, 소라, 피조개 등의 패류가 있고, 기타 수산물로는 문어, 털게, 대게, 다시마 등을 들 수 있음

#### 4. 민간부문 투자협력사업의 발전방안

○ 투자협력사업의 평가 한계

- 민간부문 투자사업은 미흥식품과 태영수산이 대표적 협력사업임. 그러



나 1999년이후 담보상태에 머물러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볼 수 없음.  
두 기업만을 기준으로 투자협력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

○ 조총련계 투자기업들로부터의 교훈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조총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130여개의 대북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실패하였음
- 합영·합작 사업들의 실패 또는 부진의 요인을 정리해 보면, 첫째, 북한측의 원자재 공급이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둘째 사회간접자본이 미비된 상태에서 물류비용의 과다하게 소요됨. 셋째 합영회사 종사자는 책정된 임금 중에서 일부만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노동의욕을 제고하는 유인이 없음. 넷째, 북한은 외국파트너들의 기술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감을 갖고 있음. 즉 신기술의 채택과 경영혁신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 논의된 경제적인 요인이외에 관료의 부패, 계약이행 경시, 행정서비스취약 등 북한사회의 비합리성이 지적되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의 대북 합작투자에 있어서 고려 사항

- 우선 열악한 행정서비스를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중앙차원의 공적 창구를 통한 권력적 보호막이 필수적임
-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영권과 인사권은 투자자가 확보해야만 할 것임. 또한 경영진과 핵심기술자들은 현지에 상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5. 남북한 공동어로사업의 발전방안

○ 기본 방향

- 동 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첫째 조건은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조업이 용이해야 함.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 선박안전관리, 해상기상여건, 어획물 양륙항 및 항행거리 등이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다음은 조업선원의 신변보장과 조업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이를 위해 어업협력 기본합의서에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부속서 또는 별도합의서에 명문화가 필요하며, 남북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례별로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할 것임

○ 남북어업협력회담 추진

- 남북어업협력합의서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남북어업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는 세부 이행사항을 규정하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남북어업공동위원회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 남북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

- 남북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에 어업인들의 어로활동 보장, 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쌍방간의 수산분야 협력사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임

○ 조업수역에 대한 어업자원조사 및 시험조업 실시

- 북측이 제의한 어장의 어업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어업협력사업은 곤란하므로 자원조사의 실시가 필요함
- 상업적 조업의 선행단계로 시험조업을 실시하여 조업수역에 대한 경제성 및 조업여건 등을 파악하여야 함

○ 본격적인 조업 실시 및 협력사업 확대방안 강구

- 남북한당국간 협상을 통하여 조업수역, 입어조건 등을 합의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어업협력사업실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어업협력사업이 정착되면 어선·어구의 현대화, 수산물가공시설 및 기술지원, 수산기술 개발 및 교류 등 수산분야 전체로 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는 북한을 좀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상식적인 범주에서 보면 북한은 합리적이고 개방적이지 않다. 이는 북한체제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는 그들 나름대로 모종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그 질서를 우리의 기준에 따라 해석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 최근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벼랑끝까지 치닫는 모험을 하면서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 공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이율배반적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남북한간에는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조성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가 다방면에서 서서히 구축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00년 12월 16일에 있었던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한당국이 ‘남북당국자간 어업협력 회담’ 을 제의하였고 남측에 동해어장의 일부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수산부문에 있어 실행가능한 남북협력사업을 정리해 보면,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북한내 생산 및 유통시설 합작투자, 그리고 북한측어장 입어사업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sup>1)</sup>

첫째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은 1988년 ‘7·7 선언’ 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상호교역 문호가 개방된 이후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국내거래로 규정되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2000년 이후에는 총

---

1) 강무현,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 2001년 4월, 강원도, 「강원비전 포럼」, 15쪽



반입금액 중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을 상회하고 있다.

둘째 북한내 생산 및 유통시설 합작투자사업은 1990년대 후반기부터 태영수산의 가리비양식업, 미홍식품의 어패류채취와 가공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북한 현지에 합작투자를 추진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주)해주의 합작입어, 안승유통의 붉은대게입어, 수협중앙회의 합작입어 등 대북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창기의 기대와는 달리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들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명목만을 유지하는 실정에 머물고 있다.

셋째 북한내 어장의 공동 입어사업도 북한 국내와 직접 접촉을 갖지 않는 해양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적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체제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업협정에 따라 어장이 축소된 남한 어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북측이 제안한 어장의 구체적인 위치와 조업방법 그리고 안전보장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부존자원이 상이한 두 국가가 경제협력을 한다면, 양측 모두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상호이익의 창출을 제약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북측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협력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주의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면 어떤 사업과 정책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자립적 민족경제<sup>2)</sup>를 기본으로 대외 경제협력을 보완적으로만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sup>3)</sup> 따라서 상황과 여건변화에 따라 경제난국에 처한 당사자인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원치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여건들의 미성숙으로 인해 수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3권, 79~80 쪽

'자립적 민족경제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제를 말한다.'

3) 권영경,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 전망', 101쪽, 통일부 「북한의 이해」, 2002



따라서 남북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폐쇄사회를 유지하는 한에는 남북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세기 동안의 분단 상황에서 군사적 대치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이한 체제를 유지하던 두 국가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빠르게 성사된다고 해도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된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양측의 인식차이를 명확하게 구명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남측과 북측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제약조건과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최소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남북협력사업의 특성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바다를 통해 가는 것과 육로를 통해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는 반세기 철책선이 무너지는 것이요 냉전이테올로기의 종언과 함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하물며 북한수역에서 남북한공동조업이 이루어져 후손에게 물려줄 자원을 관리하는 협력이 성사된다면, 이는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수반되는 비용부담과 협력추진에 있어 제약조건들을 해소시키는 대국민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남한 어업인과 단체에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사업의 기본정책기조를 제공하고 협력사업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협력사업의 대상업종과 사업의 추진방식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수산업과 협력사업에 관련된 연구는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면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선행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sup>4)</sup>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남북한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

4) 대표적으로 i) 김민중, ‘남북한 수산업의 발전방향’, 1996, ii) 최정운, 박성쾌 외 ‘21세기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한 수산협력방안’, 2000, iii) 신영태, ‘북한수산업의 구조와 실태’, 2001 등 몇 편의 논문들이 있으나, 이들 논문은 공개되지 않았음. 본



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정리하였으므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역할 뿐 아니라 남북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협력사업을 진전시킴에 있어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한의 대북경제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산부문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본 과제의 연구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책자료와 간행물 그리고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추진과정에서 관계자간 검토회를 개최하여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2장에서는 협력의 상대국인 북한의 수산업 관리체제, 어장과 자원 이용 현황, 어업관리 실태, 어구이용 현황 및 양식업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바 있는 동해어장 일부를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북한과 인접국간의 해양경계와 어업관계를 정리하였다. 어로한계선·특정해역·조업자율규제조치·서해 5도 주변수역과 북방한계선의 문제 등 남한과 북한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업관계 등이 검토되었으며, 이와 함께 북한이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일본·중국과의 어업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구조와 수입 현황을 분석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필요한 협력부문을 정리하였다. 또한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경위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실태와 문제점, 민간부문 협력사업의 추진사례 등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거시적으로 정리하기 하였으며, 남북협력사업

---

논문은 이들 자료와 논문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였음.



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내외적인 제약조건과 장애요인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이후의 환경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 조짐을 논의하였다. 최근의 남북관계의 환경변화 속에서 앞으로 검토될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과 동해 북부어장을 비롯한 북한측 어장의 입어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적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협력에서 논의되는 사업을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문제, 북한측 어장에 대한 입어사업, 양식어업의 합작투자, 유통·가공시설 투자사업 등 현실적 실현성을 갖는 사업으로 논의를 한정하였다. 서해에 있어서의 어장환경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 원양어업에 있어서의 협력 등 협력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제 2 장 북한의 수산업 관리체제와 어업현황

### 1. 북한의 수산업 관리체제

#### 1) 수산업 관리기구

북한의 수산업체제는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기본생산단위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상이한 지도체계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

1980년대 초의 수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의 비율은 7 : 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해가 서해보다 생산량이 월등히 많았다. 총어획량의 83.2%를 동해안에서 생산하였으며, 이 중 국영수산부문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sup>5)</sup>

북한의 수산행정체제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행정 계통조직상으로 보면 「정무원→수산위원회→수산부→도수산관리국→국영수산사업소」로 연결되는 것이 북한 수산행정의 계선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무원→수산위원회→협동수산지도총국→도 협동수산경리위원회→시·군 수산협동조합이사회→수산협동조합」으로 연결되는 것이 북한 수산행정의 방계조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수산행정 최고기관은 정무원 산하 수산위원회라 할 수 있고 그 집행기관은 수산부와 협동수산지도총국의 두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집행은 지도총국을 축으로 수산업 활동을 전개해 가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위원회는 내각서열 11위이며 농업위원회는 10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sup>

---

5) 「조선지리지전서」, p.246.

6) 최정운,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 1998년 제4차 수산과학심포지움, 1998.12.4, pp.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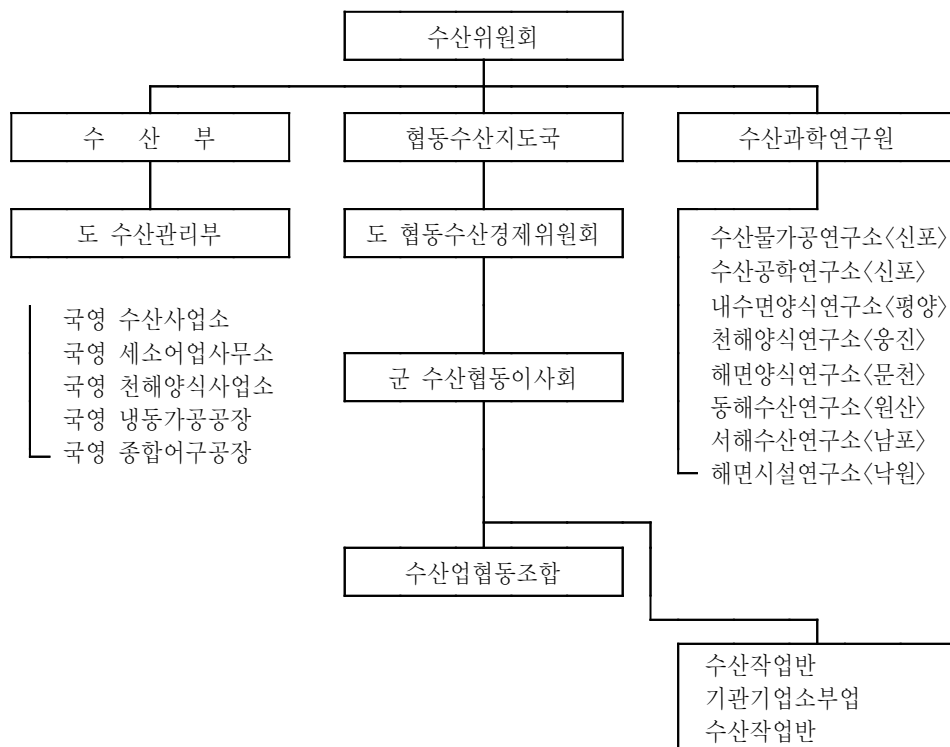
수산부는 수산부문의 최고행정기구로서 3개국(국가수산업국, 협력국, 내수면 어업국)과 20개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 수산관리부는 지역수산업을 관리한다.

연구기관은 수산과학연구원 산하의 8개 연구기관이 있으며, 수산물생산을 통한 식량확보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산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기본적인 수산업 생산단위는 크게 두 형태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국영 수산사업소와 그 계통작업반이며, 다른 하나는 수산협동조합과 그 계통작업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북한의 수산행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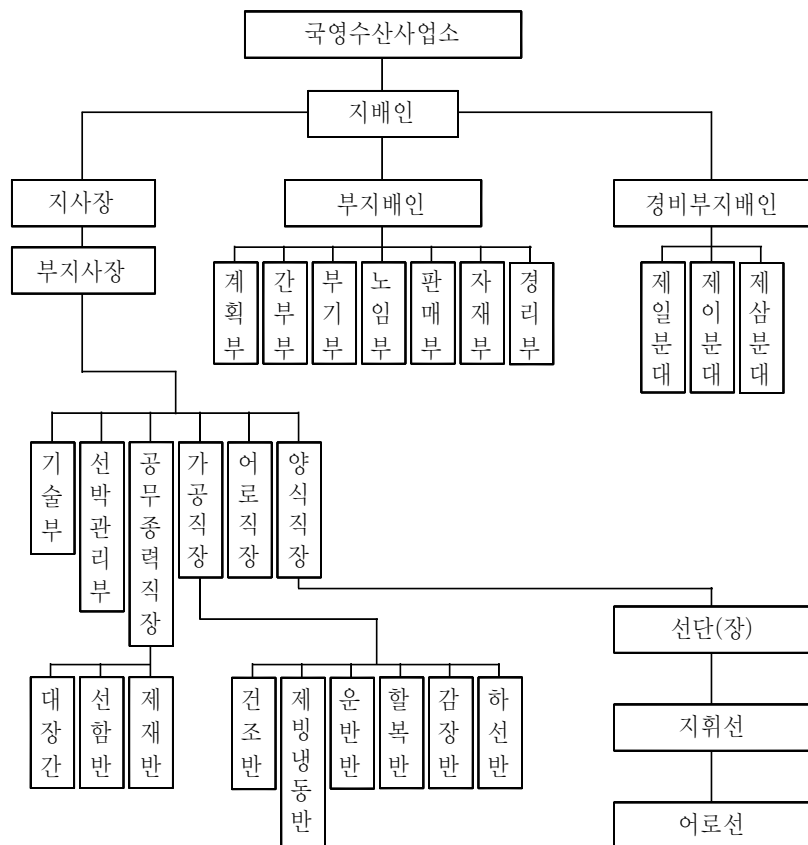


그러나 합영회사도 수산업 생산단위이며, 군의 식량자급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군도 수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생산주체는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이고, 개별어업자는 생산에 아무런 독자성이 없는 두 기관의 작업반원으로 우리의 임금노동자의 지위에 불과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국영수산사업소는 우리의 기업체에 유사하고, 수산협동조합은 남한의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과 같은 조직의 형태라기보다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어촌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북한의 국영수산사업소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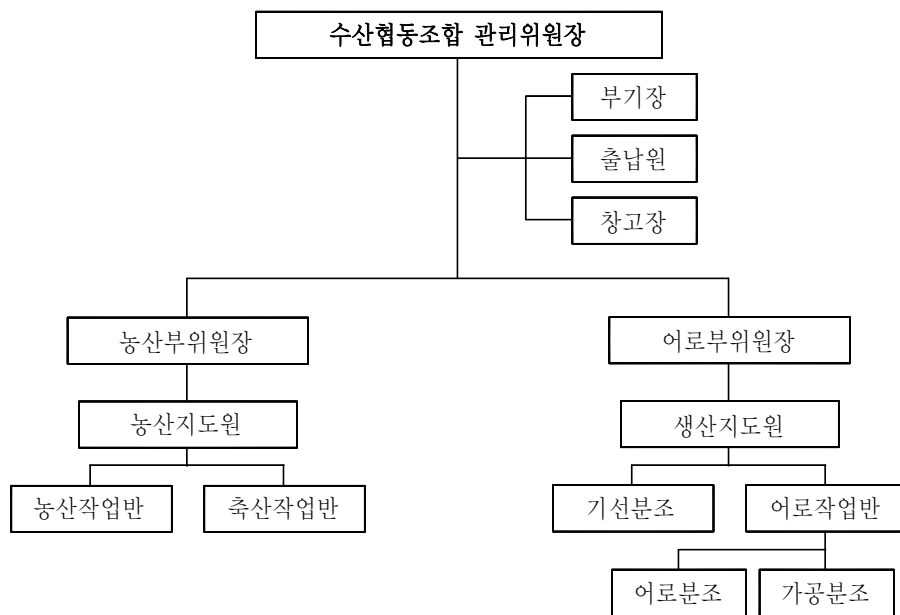


이와 같은 국영수산사업소가 북한에는 88개(1990)가 존재하고 1개 국영수산사업소는 보통 500~3,0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북한에서는 1급에서 4급으로 규모를 계층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진, 김책, 원산, 해주, 남포, 어대진 등지의 수산사업소는 1급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그 밖의 지역 수산사업소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2~4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수산협동조합은 전국에 284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도별로 살펴보면 함경북도 68개, 함경남도 67개, 강원도 33개, 평안북도 44개, 평안남도 40개, 황해도 32개이다(〈그림 2-3〉 참조).<sup>7)</sup>

〈그림 2-3〉

북한의 수산협동조합의 관리조직



7) 이외에도 50여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도별 분포 미확인 상태임.



북한의 어업은 남한에 비하여 어업세력이 미약하고 해안선의 길이도 짧은데 협동조직의 수가 남한의 86개보다 3.3배나 더 많은 것을 보면, 북한은 협동조직의 업무구역을 대단히 협소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협동조직이 직접 어업생산에 관여하면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영수산사업소의 어로직장과 양식직장, 그리고 수산협동조합의 어로분조와 가공분조의 관리체제와 분배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군단위의 수산협동관리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 대표들의 선거로 구성되며, 수산지도위원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을 장악하여 협동농장, 수산작업반, 공장·기업 소부업, 수산작업반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자재보강, 어선수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산물관련시설을 보면 수산공장 77개소, 양식농장 32개소, 수산협동농장 280여개소, 내수면양식장 100여개가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생산수단과 생산물들을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sup>8)</sup>

8) 국가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 (사회주의 헌법 제21조)을 하는 부문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이 있다. 북한에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 헌법은 국가소유를 전체 인민의 소유로 보고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의 두 가지 형태의 단체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에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다. 사회단체는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최초로 소유주체로 거론되었다.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사회협동단체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 을 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즉 사회협동단체는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 들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22조) 사회협동단체 소유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협동적 소유이다.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동일한 유형에 속하지만, 북한은 전인민적 소유형태를 더 고차원적 소유형태로 본다. 즉 두 소유 형태는 “사회화 수준에서 차이를 가질 뿐 사적 소유의 폐절에 기초하여 발생한 사회적 소유로서 동일한 유형의 소유에 속한다” 는 것이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결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 2) 북한의 수산관련 법규 및 제도

북한의 어업제도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lt;표 2-1&gt;

북한의 어업제도 개황

수산업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6년 주석교서 : 수산자원 보존 목적</li> <li>○1989년 주석령 : 수산자원보호 촉진</li> <li>○1995년 수산업법 제정</li> <li>○1997년 수산업법 하위법령 제정</li> <li>○1999년 양어법 제정</li> <li>○1977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정령</li> <li>○197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수역활동에관한규정</li> <li>○1947년 국영수산사업소 규정, 인민위원회 결정</li> <li>○1952년 조선수산업협동조합 기준 제정</li> <li>○1949년 수산물제품검사에관한규정, 농림성규칙</li> <li>※ 이밖에도 최고권력자와 노동당의 강령·교시 등이 초법적 역할을 함</li> </ul>
허가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가권자 : 정무원 수산위원회 위원장</li> <li>○허가기간 : 5년</li> <li>○허가업종 : 6개(전용어업, 양식어업, 포경어업, 공선어업, 해수어업, 기선 홍치어업)</li> </ul>
신고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가권자 : 도, 시·군 인민위원장</li> <li>○신고기간 : 1년</li> <li>○신고업종 : 허가어업이외의 어업(정치어업, 신고어업 등)</li> <li>※ 면허어업제도는 없음</li> </ul>

북한의 수산업관리에 관한 법규는 i) 어업에관한규정(1949), ii) 양식업에 대한 내각과 중앙상무위원회의 공동결정(1958), iii) 수산기업소규정(1947), iv) 수산제품검사에관한규정(1940)의 4가지 기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최고권력자와 노동당의 강령과 교시 등이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초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들은 명령형식을 통해 수시로 실천방안들이 수립되기도 한다.<sup>9)</sup>

9) 최정운, 박성쾌 외, '21세기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한 수산협력방안', 해양수산부, 2000. 12.



1995년 1월에는 최고인민위원회가 수산업 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수산업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이어서 1997년에는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수산부는 금어구(禁漁區)와 금어기(禁漁期)의 설정, 망목의 크기와 어법의 규제, 해양오염의 방지, 수산자원의 번식을 위한 배양장 건설 등에 관한 다수의 부령(部令)을 제정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북한의 수산업 관리에 관한 법체계가 최근에 혁신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3월에는 양식업 관계규정을 보완한 양어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어법은 양어수역의 관리와 수산물 자원의 조성·생산, 자연보호 제도 및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어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어법은 양어수역의 관리,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생산, 자원의 보호, 사업의 지도통제 등을 규정한 6개장과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수산업 생산정책

북한은 수산업을 인민의 식량을 보충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된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공업제품 수출이 미미한 북한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외화획득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에 대해 "바다로부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제2차 경제개발 7개년계획 기간(1978~1984)중에 수산물생산 목표를 그 전년보다 무려 2배가 높은 350만톤으로 책정한 바 있었으나, 1984년도 실제 생산량은 165만톤밖에 되지 못하여, 53%의 계획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또 제3차 경제개발 7개년계획 기간(1987~1993)에는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의 목표량 1.4배인 500만톤 생산목표를 세웠으나, 이 목표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1993년의 실제 생산량은 목표치의 36%인 178만톤에 그치고 말았다.



최근 제4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94~2000)의 성과도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다. 투자재원의 조달, 계획추진의 차질 등으로 계획적 개발정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량이 생산목표량과 차이를 갖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생산방식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생산방식문제에 대해 사회주의 생산체제 자체가 갖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북한 수산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적 생산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개선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술과 자본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북한 어장을 개발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간다면, 북한의 수산업 생산관리 체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어장환경과 자원이용 현황

### 1) 어장 환경

북한이 관할하는 바다는 동해와 서해로 완전 분리되어 연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장환경과 수산생물의 분포도 상이하다.

동해의 주요어종은 냉수성으로 명태, 청어, 가자미, 은어 등을 들 수 있으며, 온수성으로는 정어리, 멸치, 꽂치, 학꽂치가 대표적이다.<sup>10)</sup> 동해수역의 면적은 97만km<sup>2</sup>로 추정되며, 냉온수성어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는 서해에 비해 어획량이 월등히 많다. 이 중에서 명태가 대표적인

10) 북한 동해수산연구소, 수산과학기술논문집, 1986

북한 동해 가까운 바다에서 어류 389종, 수심 200~1,000m의 깊은 바다에서 어류 65종, 무척추동물 47종을 조사, 분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가까운 바다의 어류 중 산업적으로 가치 있는 어종으로서 명태, 도루묵, 가자미, 임연수어, 멸치, 정어리, 고등어, 꽂치, 송어, 방어, 까나리, 등 55종을 들고 있으며, 수심 200m 이심의 깊은 바다에서는 산업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서 저자가오리, 명태, 물수배기, 벌레문치, 칠성갈치,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홍가자미, 횡대어, 에도꼭정어, 황볼락, 임연수어, 물미거지, 미거지 등의 어류와 붉은 대게, 대게, 털게, 북쪽분홍새우, 도화새우, 미끈자주새우 등의 갑각류, 그리고 빈돛불오징어, 골뱅이류 등의 연체동물을 들고 있다.



어종이며, 오징어, 꼰치, 멸치, 정어리 등은 회유성어족으로 봄여름에 북상하고 가을겨울에 남하하면서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표 2-2〉 참조).

동해는 대륙붕의 폭이 좁고 해안선이 단조로우며 섬이 적다. 조석간만의 차는 평균 50cm 이내 수준이며 평균수심은 1,700m이고, 최대수심은 3,000m 이상이 된다.

〈표 2-2〉

동해 북한수역의 어종별 어기, 성어기, 수온

어 종	성어기(월)	성어기수온(℃)	남하어기	수 역
명태	11~1	2~4		
오징어	7~8	10~17	9~11	동해전역
꼰치	6~8	14~24	9~10	"
고등어	7~8	12~18	9~10	"
정어리	6~7	12~18	9~10	"
방어	6~8	14~19	9~11	"
멸치	5~6	13~16	10~12	"
도루묵	10	5~10		
청어	2~4	2~5		
임연수어	9~11	7~10		
까나리	5~7중			
대구	9상~12중			
홍어	3상~5중			
상어	11상~12하			
학공치	5중~6하			
황어	3상~5하			
송어	4상~5하 9중~11상			

자료: 日本海外漁業協力財團, 東アジア關係國の漁業事情, 1994

동해는 타타르 해협을 통하여 오호츠크해에 접해 있으며, 두만강과 흑룡강으로부터 연안수가 유입되고 리만 해류와 혼합된다.



북한 한류는 난류계에 비해 영양염이 풍부한 어장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해역의 주 어종은 일반 한류계 어장과 마찬가지로 저서어족이 중심이 되며 어종의 수는 적은 대신에 일부어종의 자원량이 서해에 비해 풍족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오후츠크해에서 자원남획이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철저한 자원조사와 시험조업을 필요로 한다.

동해는 북쪽으로 러시아와 동쪽으로는 일본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우리와 인접한 어장을 갖고 있으므로 인접국과의 어업관계의 형성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서해측 수역은 얕은 수심과 만곡이 많다. 따라서 대구, 갈치, 삼치, 전어, 도미류, 가자미, 홍어 등의 고가의 어종뿐 아니라, 김과 미역 같은 해조류도 풍부하며, 바지락, 굴, 새조개 등의 패류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해주 연안과 신미도 해안을 중심으로 조기, 갈치, 민어, 넙치, 가자미, 홍어 등의 어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서해전역에서 갈치가 어획되고 있다(〈표 2-3〉 참조)

〈표 2-3〉

서해 북한수역의 어종 별어기, 성어기, 수온

어 종	어 기(월)	어 종	어 기(월)
조 기	4중~6하	농 어	6~7
갈 치	5중~11중	까나리	5~7
고등어	5중~7상	홍 어	6~9상
송 어	1상~2, 4, 9~12하	꽃 게	3~5, 10~11
민 어	6~7, 10	백새우	4하~5, 9~11상
병 어	5상~9중	뱅 어	4~5하
가자미	5상~9하	양 태	4~6, 9~11

자료: 日本海外漁業協力財團, 東アジア關係國の漁業事情, 1994

서해수역의 면적은 43만km<sup>2</sup>로 추정되며, 북한관할수역의 평균 수심은 44m이고 최대 수심이 80m 정도의 대륙붕을 형성하고 있어 어장조건은 양호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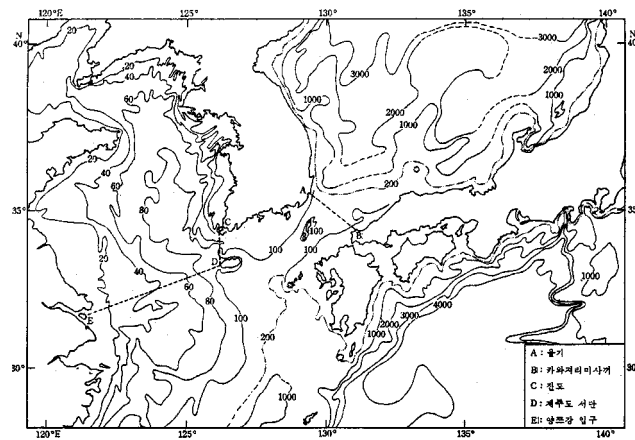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측 서해수역은 다양한 어족자원의 산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매우 크고 지역에 따라서는 6노트이상의 급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군밀집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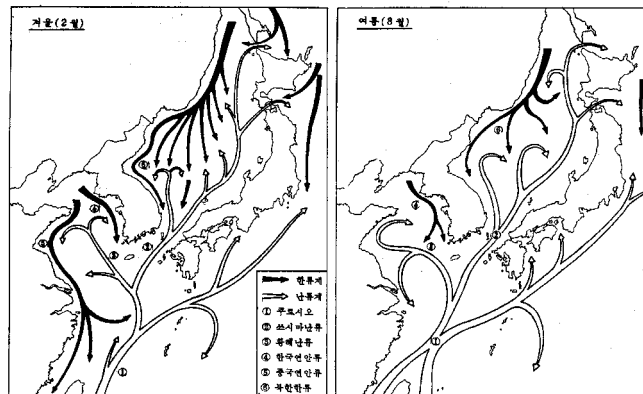
〈그림 2-4〉

한국근해의 해구구분 및 수심도



〈그림 2-5〉

한반도 근해의 표층 해류도





서해는 한류계가 존재하지 않고 북상하는 황해난류가 냉각되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안을 따라서 남하한다. 그러므로 주로 난류계인 황해산 어족은 제주도 근해까지 남하하여 월동하므로 겨울철에는 어획이 저조해진다.

또한 북한의 수산물 양식시설은 동해안에 약 40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이 일본의 자본 및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서해에는 합영 또는 합작회사로 운영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양식장이 5개소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11)</sup>

내수면은 강과 하천이 9천ha수준이며, 호수와 저수지가 4만ha정도이고, 간척지가 1만ha로 추정되고 있다. 내수면에서 양식되는 어종은 북한산잉어, 중국계잉어, 무지개송어, 송어 등 20여종에 이르고 있다.<sup>12)</sup>

북한의 원양어업 부문은 실적이 많지 않다. 과거 1960년대부터 실포, 청진, 김책, 양화를 기지로 하여 북한의 원양어선이 오호츠크해와 북서부 태평양의 구소련해역에서 조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란과 앙골라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쌍무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원양어업 진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 2) 자원이용 현황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양 수산동식물이 530여종이고 내수면 동식물이 120여종으로 총 650여종으로 보고 있다. 이중에서 어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용성을 갖는 수산동식물은 어류 75종, 패류 20종, 해조류 15종, 기타 10여종으로 총120종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해역별 주요어종을 살펴보면 <표 2-4>과 같다.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통일부 추정에 의하면 <표 2-5>와 같다. 1997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남쪽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197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어업생산량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신영태, “북한수산업의 구조와 실태”,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제57호, 1999년 9월

12) 강무현, 「강원비전 포럼 세미나 자료집」,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강원도, 2001. 4.



이후 남한은 원양어업과 양식어업부문이 1980년대까지 크게 발전함에 따라 남한의 생산량은 300만톤을 상회하여 북한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연근해어업에 주로 의존하였고 어획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명태와 정어리의 자원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유류 및 어업자재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4〉

북한의 해역별 주요어종

구 분	동 해 안		서 해 안	
	어업자원	주요 어장	어업자원	주요 어장
어류	명태	강원 연안	조기	평안북도, 황해도
	고등어	전 연안	민어	전 연안
	청어	전 연안	삼치	황해도
	대구	전 연안	뱅어	평안북도 압록강
	가자미	전 연안		하구
	방어	전 연안	가자미	전 연안
갑각류	게	강원 이남	새우	전 연안
패류	굴	강원 연안	백합	평안남도, 황해도
	가리비	전 연안	굴	전 연안
연체동물	오징어	함남 연안	바지락	전 연안
해조류	미역	강원, 함북	꼬막	전 연안
기타 수산동물	해삼 성게	전 연안 강원, 함남	미역	황해도

자료 : 조선중앙연감

그 결과 북한의 1998년도 생산량은 1960년대 수준을 밑도는 63만톤에 머무



르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은 최근 양어사업을 강조하고 있다.<sup>13)</sup>

〈표 2-5〉

남북한 연도별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톤, %

연 도	남한(A)	북한(B)	B/A
1960	342	460	134.5
1965	616	773	125.5
1970	935	931	99.6
1975	2,135	1,304	61.1
1980	2,410	1,700	70.5
1985	3,103	1,781	57.4
1990	3,275	1,455	44.4
1995	3,348	1,052	31.4
1996	3,244	876	27.0
1997	3,243	650	20.0
1998	2,835	603	21.2
1999	2,910	625	21.4
2000	2,514	576	22.9

주 : 북한은 1985년 생산량이 360만톤이라고 주장

자료 : 통일부, 해양수산부

13) 통일부, 통일백서 - 경제부문, 2000.

‘1997년 6월 국방위원장이 황해남도 용연군을 시찰하면서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한 이래 과학원 수산과학분원 산하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양식어종을 개발·보급하는 운동을 벌이는 등 양어장 보수 및 건설에 치중하였고, 동시에 「수산자원 조성·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1997.7), 「물자원법」(1997.8), 「바다오염방지법」(1997.12) 등 관련법규를 연이어 제정하였다. 1998년에도 양강도내 공장·기업소 들은 164개소에 총 40정보 규모의 양어장을 건설하였고, 개성시와 배천군도 6정보의 양어장을 건설·보수하였다. 1999년에 들어서 김정일은 조선인민경비대 제1216부대 양어장(5월), 나효진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 양어장(8월), 차주현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 양어장(8월)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양어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표 2-6〉

## 북한 동해안의 어류 및 패류 생산량

단위: 톤

어 류	생산량	패 류	생산량
합 계	146,100 ~ 168,100	합 계	7,550 ~ 7,950
명 태	28,000 ~ 50,000	전 복	100
고등어	20,000	해 삼**	500
오징어*	50,000	피조개	300 ~ 700
정어리	20,000	가리비	200
청 어	10,000	키조개	50
대 구	5,000	소 라	300
도루묵	2,000	재 첩	800
넙 치	500	섭조개	300
가자미	500	성 계**	2,000
복 어	200	골뱅이	3,000
아 귀	800		
쥐 치	200		
문 어*	3,000		
우 력	500		
병 어	200		
꽁 치	3,000		
대 계*	800		
자 계*	1,000		
털 계*	400		

주: \* 어선에 의해 어획되는 관계로 편의상 어류로 분류

\*\* 편의상 패류로 분류

자료: 내부 자료

어업생산에 있어 중심이 되고 있는 동해안의 생산량을 품목별로 보면, 어류는 매년 146,100 ~ 168,100 톤 가량 생산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중 오징어와 명태가 최대 50,000톤으로 가장 많고, 정어리와 고등어가 각각 20,000톤, 대구 5,000톤, 문어와 꽁치가 각각 3,000톤 가량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어선 및 어구 이용 현황

북한의 어선관리체제는 정무원결정 제37호(1998. 7. 23.)에 의거하여, 일반 동력어선들에 대해서는 국가해사국의 해사감독처에서, 돛배와 전마선과 같은 무동력어선에 대해서는 안전국 국토처에서 등록과 감독관리를 맡고 있다. 모든 선박에 대해 도별, 종류별, 소속부서별, 소유기관별로 번호와 약자를 부여하고 끝자리에 고유번호를 붙여서 선박의 명칭만 보면 선박의 종류와 소속부서 그리고 기관 등을 쉽게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sup>14)</sup>

북한체제를 볼 때, 어선의 입출항이 철저히 관리될 것이며 모든 어선들은 어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또한 선박보유기관의 책임자는 매년 2월과 6월에 년2회 보유선박의 종류별로 대상어종과 어획량 그리고 어기 및 어장이 기입된 어업허가증을 수산위원회 산하의 수산관리국에서 발급 받아 이를 선장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선박은 매월 4가지색으로 된 길이 40cm×폭 20cm의 암호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심지어 무동력선의 경우에도 노와 돛대걸이 등을 경비대의 선박단속반에 반납하여 보관시키고 있는 등 철저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북한은 어선을 전시에 대비하는 보조함정으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군사동원의 비밀사항으로 간주하여 어선보유실태를 공식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어선은 크게 무동력 어선과 동력어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무동력선은 목선이 대부분으로 쪽배, 전마선, 범선으로 구분되고, 동력선은 주로 철선으로서 15마력 4톤정도로부터 대형어선까지 있으나 선박의 규모는 주로 마력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쪽배는 선체길이 5.6~6m, 선적용량 0.4~0.5톤의 소형선박으로서 연안에서 자망, 낚시, 통발, 오징어 낚시에 사용되고, 범선은 선체길이 7~8m, 선적용량 2~5톤으로서 연안의 소형 어선어업에 이용되고 정치망의 양망 및 운반에도 이용되고 있다. 범선은 쪽배와 유사하나 크기가 선

14) 이하 내용은 최정운, 박성패 외, '21세기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한 수산협력방안', 해양수산부 비공개자료, 2000. 12. 등 논문을 중심으로 함



체길이 12~13m, 선적용량 8톤 정도로서 무동력선으로서는 가장 큰 어선이다. 이들 무동력선은 노를 저어 인력으로 운항하고 있으나, 전마선과 범선은 돛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동력어선은 1,500여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AO가 추정한 북한의 동력어선의 종류와 크기는 <표 2-7>과 같다.

&lt;표 2-7&gt;

북한의 대표적 동력어선의 현황

단위 : 톤, 척

구 분	어선규모	척 수
공모선	10,000	8
냉동운반선	3,000 ~ 7,000	12
대형트롤선	3,750	11
다목적선	450 ~ 485	554
어망어선	270	16
통발어선	30 ~ 100	766
소형트롤어선	30 ~ 100	170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의 어로실태조사, INFOFISH INTERNATIONAL, 1988

일부 공모선들이 외국에서 건조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어선들이 북한내에서 건조되었으며 엔진과 장비도 북한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다. 8척의 대형어선은 원양어선단을 구성하여 베링해와 오호츠크해의 공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바 있다고 한다.

주력어선은 450톤 내외의 수준이며 북한은 이를 만능어선이라는 이름으로 다목적 어선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어선은 트롤, 선망 등의 복합선으로 이용되고 있다.

30톤 수준의 소형 트롤어선과 통발 어선들이 900여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해에서 꽃게잡이에 이용되는 어선들이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

북한어선들은 엔진마력수가 남쪽의 우리 어선들에 비해 현저히 낮고 노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어선들이 조업경쟁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력수를 높였던 현상은 북한에서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엔진은 연료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구형이며, 어창에 냉동설비와 방열장치 등도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트롤어법으로 어획한 후에 이를 양육하여 냉동처리하므로 상품성을 제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유류부족과 함께 정비불량, 부품부족, 기관고장 등으로 실제 조업이 가능한 어선수는 400여척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어업에 이용되는 무동력어선에 대해서는 인용되는 자료마다 4,000척~9,000척 까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무동력선 중에는 돛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어선도 300여척이 있으며, 20~80 마력수준의 중국어선들이 북한측 수역내에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것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주요 어구들은 8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며, 특히 어망은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한다고 한다. 사용되는 어구어법의 종류도 남한에 비해 단조롭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통발, 주목망, 안강망, 정치망 등이 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어법은 트롤일 것이다. 1970년대부터 동해수산대 등으로부터 고급인력이 배출되고 있어 트롤어법은 상당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풍부한 수산자원인 명태의 대량어획을 위해 어선의 대형화를 도모하면서 트롤어법이 1970년대부터 보급된 것으로 추측된다.

동해의 주요 어구어법을 보면 <표 2-8>와 같다.

<표 2-8>

동해 주요 어류 대상 어구 어법

어구 어법 (표준명)	덤장 (정치 망)	뜨랄 (트롤)	홀치개 (소형 선망)	걸그물 (자망)	낙시 (낙시)	주낙 (주낙)	조리개 (선망)	긴그물 (장망)	후리 (후리)	작 살	살 (미로함 정어구)	반두 (조망)
대상어종수	247	219	215	124	96	96	41	29	25	9	5	5

자료 : 손용호, 조선동해어류지, 1980



여기서 덩장은 정치망을 말하는 것으로 연안에 내유하는 대부분의 어류는 이 어법으로 잡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어선인 전마선 또는 범선을 사용하여 인력으로 양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료유 부족이 심각한 북한으로서는 연안 어업의 상당한 부분을 덩장어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콩치를 대상으로 하는 흘림그물(유자망), 가자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겹자망(2·3중자망), 명태 자망과 주낙(연승) 등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류 이외에도 오징어, 게, 새우등을 대상으로 오징어 채낚기, 게·새우 통발어업이 보편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 수산연구소에서 발행한 수산과학기술논문집(1986)에 의하면 겹자망의 어획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오징어를 집어등과 선망으로 어획하기 위한 기초 연구, 도루묵을 집어등과 정치망으로서 어획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게 통발의 개량 연구 등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오징어를 선망으로 어획하려는 시도는 당시로서는 남쪽의 학계나 업계에서도 착안하지 못한 발상으로서 1980년대에는 다양한 어구어법의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에서는 조기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안강망어업이 가장 성행하였으나, 현재는 어획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자원사정과 경제사정 등으로 조업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꽃게 트롤, 분사식 조개형망 등이 연구보고서 등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안강망과 기선저인망을 겸한 혼합형 안강망도 개별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서해안에서는 강한 조류를 이용하여 개막이 그물, 주목망, 낭장망 등이 연안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식량 확보를 위한 수산물 생산에 대한 정책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수산계 대학과 수산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 보급과 함께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있다. 따라서 어구어법 그 자체의 잠재적 수준은 결코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미 1980년대 초반에도 중층트롤 어법이 보급된 바 있으며, 어로장비 및 어업자재의 대부분을 자력으로 생산하여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선전은 단순하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어로 기술은 고도의 숙련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종합응용과학의 산물이므로, 최근처럼 심각한 물자 부족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4. 수산물 양식업 현황

북한은 양식업을 어로어업 및 수산물가공업과 함께 3대 중요부문으로 인식하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는 국가기밀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sup>15)</sup>

북한의 양식기술 수준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남한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양식 어종도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먹이를 공급하지 않고 자연의 생산력을 이용하는 해조류와 패류 등의 양식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역이나 김 등의 해조류와 바지락, 굴 등의 패류가 주로 양식되고 있다. 어류 양식에 있어서도 먹이를 많이 공급하지 않고 역시 자연의 생산력을 이용하는 내수면 양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열대메기 등 성장이 빠르고 고밀도로 양식할 수 있는 어종의 종묘 생산과 축양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설투자나 사료의 대량공급이 요구되는 바다 또는 내수면의 가두리 양식, 또는 해산어의 육상수조식 양식 등은 많이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겨울이 길고 기온과 수온이 낮은 기간이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수온이 낮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잉어, 붕어, 참돔 등 온수성 어류는 성장기간이 짧아져 남쪽보다는 불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지개송어, 연어 등 냉수성 어류는 여름철에도 지하수를 이용한다면 연속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유리한 점도 있다.

내수면의 수질 환경은 인구수나 공업화의 발전 정도로 보아 아직도 오염원이 적어 남한보다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의 수질도 남한에 비해 대체로 양호할 것이므로 내수면 양식을 위한 수질환경은 별 문제가 없을

15) 북한의 양식업 실태와 기술에 관해서 FAO 관련 통계와 북한 수산관련 잡지, 신문 및 서적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전체적으로 산업발전 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양식업을 지원하는 하부구조가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양식어종 수, 어종별 양식 생산량 및 수산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 해면양식에서의 다시마와 내수면 양식에서의 잉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술 수준이 아직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요 양식품목을 보면, 해조류의 경우 북한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역, 다시마, 김 양식이 행해져 왔는데, 이들 가운데 특히 기술수준이 높고 실제 생산량이 많은 것은 다시마이며, 냉수성 해조류인 미역도 품질이 우수할 것이다.

패류는 서해안에서 굴과 바지락 양식이 성행하고 있으나, 집약적 생산방식인 연승 또는 뗏목을 이용한 수하식 양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방적 생산방식인 투석식 및 살포식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 외에도 가리비양식이 동해안에서 남한측 양식업체의 기술지도를 받아 합작투자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나 생산량은 미미하며, 또한 전복 양식이 어느 정도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류의 경우 내수면에서 저수지나 하천수를 이용한 잉어와 붕어 양식, 그리고 먹이를 공급하지 않는 초어와 백련 등의 양식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에는 온천수를 이용한 열대메기 양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대형 및 중소 규모의 양어장 이외에도 자연호수, 저수지, 중소형 발전소, 인공호수를 양어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와서 북한 전역에서 내수면 양식에 대한 열기는 상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넙치, 돛류, 조피볼락 등의 양식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역별 양식현황을 보면, 북한의 동해는 한해수역이기 때문에 냉수성 어종인 연어, 송어 등의 양식에는 비교적 적합하며, 넙치, 조피볼락 등의 어류 양식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장 전망이 큰 어종은 연어로, 북쪽의 찬 바닷물을 이용한 연어 가두리 양식이 가능할 것이며, 여름철에도 월하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패류양식으로는 냉수성 어종인 가리비 양식이 가능할 것이며, 이 외에도 북방대합이나 전복 양식이 가능할 것이다. 해조류는 모두 양식이 가능하지만, 특히 다시마와 미역 등은 품질이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망한 양식품종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서해안은 남한의 서해안과 마찬가지로 갯벌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나 토종 굴 등의 살포식 양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이 깨끗하다면 대합 양식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남한의 서해안에서와 같이 수질환경이 나쁘다고 한다면 질병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

새우 축제식 양식은 남한의 서해안과 마찬가지로 양식 적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당한 양의 새우류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수온이 남한보다 다소 낮을 것이므로 상품사이즈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종묘생산 시기를 앞당기고 양식밀도를 낮추어 빨리 성장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강화도 주변 해안에 가두리 양식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서해안 옹진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가두리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의 서해안에는 농업용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담수어 가두리 양식이 가능할 것이며, 하천수를 이용한 유수식 잉어 양식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제 3 장 북한과 인접국간의 해양경계와 어업관계

### 1. 남한과 북한간의 어업해양경계

#### 1) 어로한계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에 의한 한국어선의 피납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과 인접한 경계해면어장에서 어선피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4년 6월 29일 농림부예규 제32호로 어로한계선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어로한계선은 법적으로 한국어선의 어업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위적인 통제선으로서 성격을 갖는다.<sup>16)</sup>

따라서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에 맞추어 해안선과 북위 38도 35분 45초 위도선의 교차점에서 정동으로 연장한 선으로 하였고, 서해에서는 강화도 서북단 한강 하구의 창후리항에서 시작하여 불규칙적인 경로를 거쳐 그 북쪽 한계는 북위 38도 03분 위도선으로 하였다. 어로한계선은 그 동안 남북관계 사태의 진전에 따라 가장 심할 때에는 5~7해리까지 남하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긴장관계가 다소 완화됨으로써 어로한계선이 북상 조정되어 북방한계선과의 거리는 동해에서 3해리, 서해에서 6해리 정도로 좁혀졌다.<sup>17)</sup>

16) 최정윤, 박성래 외, '21세기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남북한 수산협력방안', 해양수산부, 118쪽

17) 현재 어선의 조업 중 피납방지와 안전조업 지도를 목표로 하는 국내 법규에는 선박안전조업규칙(1972. 4. 17; 행정자치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합동부령), 어선안전조업규정(1992. 9. 5; 해양수산부고시), 선박통제규정(1985. 6. 7;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공동훈령)이 있다.

그리고 그간 어로한계선의 설정 및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964. 06. 29 ; 어로한계선 설정 (동해~38° 35' 45" N, 서해~38° 03' 00" N)  
•1967. 12. 15 ; 어로한계선 남하조정(동해~38° 34' 45" N, 서해~38° 00' 00" N)  
•1968. 11. 25 ; 어로한계선 남하조정(동해~38° 30' 00" N)  
•1969. 03. 10 ; 어로한계선 남하조정(서해~37° 30' 00" N)  
•1989. 04. 13 ; 어로한계선 북상조정(동해~38° 33' 00" N, 서해~37° 55' 00" N)



동해의 어로한계선은 북한이 1977년에 일방적으로 설정했던 경제수역의 남북한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과 평행되게 정동으로 획선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해양경계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도 없고, 부여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어로한계선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쌍방의 합의나 해양법 원칙에 기초하여 획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2) 특정해역

우리 정부는 국방상의 경비 목적과 어선의 남북방지 및 안전조업 지도를 목적으로 1968년 11월 25일 동해와 서해에서 어로한계선 남쪽수역의 일정 범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특정해역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1972년 4월 17일 제정된 선박안전조업규칙 제5조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sup>18)</sup> 특정해역은 우리 정부가 한국어선의 어업활동에 대한 자위적 통제조치를 시행하는 수역이다.

특정해역의 법적 지위는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지만, 서해의 경우는 수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소령도 이북의 수역에 대하여 영해기선의 기점을 확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영해의 범위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측이 주장한 가상중간선은 유인도이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나 역사적 권원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무시될 수 없는 서해 5도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양법원칙이나 국제관행상 터무니없는 주장이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휴전체제의 일부인 북방한계선이 현존하는 해상군사분계선으로서 유효하다는 사실은 한국측

18) 동해 특정해역은 어로한계선과 북위 38도 30분, 동경 132도 37분~북위 38도 00분, 동경 132도 50분~북위 38도 00분, 동경 130도 10분~북위 38도 15분, 동경 130도 00분~북위 38도 15분과 육안과의 교차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이며 면적은 약 18,984km<sup>2</sup>이다. 서해 특정해역은 어로한계선과 북위 37도 30분, 동경 126도 00분~북위 3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00분~북위 37도 55분, 동경 124도 00분을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으로서 면적은 약 11,738 km<sup>2</sup>이다(〈그림 3-1〉 참조).



입장에서 양보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1992년 9월 5일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하여 동해에서는 특정해역의 남방한계선을 북위 37도 27분으로부터 북위 38도로 북상 조정하였고, 서해에서는 동경 124도 00분선의 어로한계선을 폐지함으로써 어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어로한계선 이북 수역의 어장은 서해에 A, B, C 어장, 연평도 주변 어장,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수역의 어장, 강화도 서방수역의 어장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동해에는 저도어장이 있다.

〈표 3-1〉

서해 5도 주변수역의 도서별 어업현황 (2000년 현재)

도서명	어업인수	업종별 어선수	주요어종
백령도	868	연승 37, 채낚기 28, 통발 4, 복합 16, 낭장망 3, 어장관리 2 [계 90척]	까나리, 멸치, 전복, 해삼
대청도	674	자망 9, 연안연승 59, 근해연승 10, 복합 15, 채낚기 11, 통발 4, 운반선 2 [계 110척]	우럭, 노래미, 꽃게
소청도	240		
연평도	688	자망 38, 채낚기 6, 복합 15, 통발 3, 어장관리 1 [계 63척]	꽃게, 굴, 바지락
합계	2,470	263척	

자료 : 해양수산부

서해 특정해역은 홍어(성어기 : 10월 1일 ~ 4월 30일), 병어(성어기 : 3월 1일 ~ 7월 31일), 꽃게(성어기 : 3월 1일 ~ 6월 30일, 9월 1일 ~ 12월 31일) 등의 주요 어장이다.

2000년 5월 현재 서해 5도 주변 해역에서 활동 중인 어업인, 어선과 그 연



안해에서 어획되는 주요 어종은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2척 이상의 선단편성 의무, 출어등록 및 출어 신고 의무, 1일 3회 이상의 위치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sup>19)</sup>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목적으로 특정금지구역에서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금지된다.

### 3) 조업자율규제조치

한국은 1975년 1월 28일 중국과의 어업분쟁 및 피납방지를 목적으로 황해의 일·중어업협정선으로부터 약 35해리 폭의 완충수역을 두는 조업자율규제선을 설정하였다. 이 선은 1992년 3월 30일 일·중 어업협정선과 일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어업활동 영역을 확대하였다가 같은 해 9월 5일 해제하고 그 대신 서해 조업자율규제해역을 신설하였는데, 이 해역은 1994년 7월 11일에 일·중 어업협정선까지 확장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서 동해 중심부의 대화퇴(大和堆)를 중심으로 한 일대 해역에 품도 높은 오징어 어장이 개발됨으로써 한국어선단이 이 어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그러나 1977년 북한과 구소련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수역을 선포함으로써 1978년 5월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화퇴어장 북부에 비공식 조업자율규제선을 설정하였다. 그 후 1980년과 1981년에 이 어장에서 한국어선 나포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정부는 1982년 4월 17일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하고 북쪽 한계를 북위 40도 선으로 하는 조업자율규제선을 대화퇴어장 북부에 공식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990년 10월에는 이 규제선을 북위 42도로 북상 조정하여 어장 확대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1999년 7월 5일에는 개정된 한·일 어업협정의 시행에 따른 어장 축소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

19) 선박안전조업규칙상 한국 주변해역은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일반해역으로 성격이 구분된다.



하여 조업자제선의 북상조정을 통한 대화퇴어장 확대조치를 단행하였다.

한편, 1998년에 개정된 한·일 어업협정상 동해중간수역과 북한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사이에 공백으로 남아 있는 유보수역의 법적 지위는 현재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차 한국·일본·러시아·북한과의 사이에 협의하여야 할 과제로서 남아 있다.

#### 4) 서해5도 주변수역과 북방한계선

서해 5도란 황해도의 대동만 입구의 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면적 47km<sup>2</sup>), 대청도(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면적 25km<sup>2</sup>), 소청도(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면적 6km<sup>2</sup>), 그리고 해주만 입구의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면적 7.4km<sup>2</sup>),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 면적 0.2km<sup>2</sup>)를 말하며, 북위 38도 이남의 경기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관할하의 섬들이다.<sup>20)</sup>

비록 이들 섬이 북한 영역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전쟁 이전부터 한국의 관할 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도 그 지위는 변경된 바 없었으며, 1953년의 휴전협정 제2조 13항(b)에 의하여 법적 지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섬의 주변수역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어장 및 해상교통로로서 그리고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쌍방간의 법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973년 이후 주요 긴장 요인으로 남아 있다. 여기서 법적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1953년의 휴전협정 규정상 육상에 대한 군사분계선(the military demarcation line)은 휴전 성립 시점의 군사접촉선(the line of contact)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해상은 당시 유엔군측이 한반도 주변수역 전체의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군사접촉선 자체가 존

20) 정확히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를 구분하면 6개 섬이라 함이 옳다.



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었던 데에 기인한다. 여기에 영해의 범위에 관하여도 유엔군측은 3해리를 주장한 데 대하여 북한측은 12해리를 주장함으로써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립된 것이 휴전협정 제2조 13항(b)의 규정이다.

이와 같이 휴전협정에는 동해와 서해의 양측 관할권을 구획하는 해양경계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유엔군 사령부측은 1953년 8월 30일 서해 5도로부터 북쪽으로 북한 점령지역과의 대략적인 중간선에 해당되는 북방한계선(the Northern Limit Line ; 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북한측에 통고했으나 당시 북한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sup>21)</sup>

그 후 20년간 북방한계선은 남북한간의 사실상의 해상군사분계선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1973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북한측 경비정들이 약 43차에 걸쳐 대거 월선침범한 이른바 서해사태가 발발하였다.<sup>22)</sup>

그리고 1974년 9월 12일에 개최된 제354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도 북한측은 한국측이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했다는 등의 선전공세를 계속하였고, 유엔측은 이를 반박하고 북한측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로 표기함)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대로 남북 불가침경

21) 외교안보연구원, 「서해 5도의 법적 지위」, 1988, p. 3.

22) 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1973, 12. 1.

동년 12월 1일 열린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측 수석대표 김풍섭(金豊燮) 소장은 “휴전협정의 어느 조항에도 서해 해면상 경계선이나 정전해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sup>1)</sup> 북쪽과 서쪽의 5개 도시를 포괄하는 수역은 북한의 군사통제 하에 있다. 그리고 휴전협정 제2조 13항(b)의 해석상 황해도와 경기도 도경계선의 서쪽 연장선을 하나의 경계선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그 북쪽은 북한의 연안해(coastal waters)이다. 따라서 유엔군측은 휴전협정의 요구에 따라 해군함정과 간첩선을 북한측 연안해에 침입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앞으로 북한측 연안해에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당국에 신청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인정된바 없다.



계선을 정한다고 하면, 휴전협정상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존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휴전협정은 그 자체의 입법적 결합을 갖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해양 경계선 합의를 위한 명료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상의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존재하는 바,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을, 서해에서는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 한국측의 입장인 반면에 북한측은 앞에서 논의한 바의 1973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서해 5도 주변수역에 대한 북한의 관할권 주장은 1992년 9월 17일에 채택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 중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채택을 위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협의회에서 다시 제기된 바 있었다. 결국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선에서 타결되었다. 여기서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의미는 서해 5도 주변수역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남북한간의 잠재적 분쟁이 현실적으로 표출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아직 미해결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나 그 부속서들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채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1999년 6월 15일 이른바 서해교전사태가 발발하여 북한해군 어뢰정 1척이 격침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1999년 7월 21일 및 8월 17일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측은 한강 하구의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경계선에서 출발하여 황해도 등산곶과 굴업도의 등거리인 점 ~ 황해도 웅도와 서격렬비열도의 소엽도와의 등거리인 점 ~ 북위 36도 50분 45초, 동경 124도 32분 30초를 지나 북한과 중국과의 해양경계선을 연결하는 선을 남북한간의 해상군사분계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99년 9월 2일에는 위의 것과 일치하는 내용의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하여 선포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0년 3월 23일 이른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1973년 12월 1일의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서해 5도 주변수역 관할권 주장과 일관된 것으로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행위이며, 유엔군



측의 북방한계선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통상적 전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23)</sup>

23) 2000년 3월 23일 북한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획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른바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중대보도를 통하여 모두 6개항으로 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북쪽 수역에 위치한 5개 섬에 대한 통항질서를 공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방송들이 보도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영해에 있는 미군측 관할하의 5개 섬들 중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포괄하는 주변수역을 제1구역으로, 연평도 주변수역을 제2구역으로, 우도 주변수역을 제3구역으로 한다.
  - i) 제1구역의 북쪽 계선은 북위 38도선으로 하고, 동쪽과 남쪽, 서쪽 계선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영해기산선으로부터 2km 폭으로 평행되게 그은 선으로 한다.
  - ii) 제2구역의 북쪽 계선은 북위 37도 41분 24초선으로 하고, 동쪽과 남쪽, 서쪽 계선은 연평도의 영해기산선으로부터 2km 폭으로 평행되게 그은 선으로 한다.
  - iii) 제3구역 계선은 우도 영해기산선으로부터 2km 폭으로 평행되게 연결한 선으로 한다.
  - iv) 제1, 2, 3구역 안에서의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우리측에 적대적인 통항이 아닌 이상 통항의 자유를 가진다.
2. 제1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1수로를 통하여, 제2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2수로를 통하여서만 통항할 수 있다.
  - i) 제1수로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상의 북위 37도 10분 03초, 동경 125도 13분 19초 지점과 소청도의 제일 높은 고지정점을 연결한 선을 축으로 하여 좌우 1마일 폭을 가진다.
  - ii) 제2수로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상의 북위 37도 31분 25초, 동경 125도 50분 38초 지점과 대연평도의 제일 높은 고지정점을 연결한 선을 축으로 하여 좌우 1마일 폭을 가진다.
  - iii) 원칙적으로 우리측 영해에 있는 미군측 관할하의 섬들에 비행기들이 드나들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모든 비행기들은 이 수로 상공을 통하여서만 비행할 수 있다.
3. 제1, 2, 3구역과 제1, 2수로들에서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공인된 국제항행 규칙들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4.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 및 비행기들이 지정된 구역과 수로를 벗어나는 경우, 그것은 곧 우리측 영해 및 군사통제수역과 영공을 침범하는 것으로 된다.
5. 제정된 수로통항시 우리측의 행동에 그 어떤 위협이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이 수로들과 통항구역이 우리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의 통항을 가로막는 구역이나 수로로 될 수 없다.
6. 이번에 제정한 통항구역과 수로는 어디까지나 미군측 관할하의 섬들이 우리측 영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며, 이 구역과 수로가 미군측 수역으로는 될 수 없다.



## 2. 러시아·일본·중국과 북한간의 해양경계와 어업관계

### 1) 러시아와 북한간의 해양경계 및 어업관계

북한은 동해에 있어서는 구소련과 1985년에 ‘영해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두만강 하구의 경계획정을 한 바 있으며, 또한 1986년에는 구소련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0년에는 1985년에 체결된 ‘영해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계를 공식화하였다.

특히 구소련과는 1974년에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1990년도에는 소련수역에서 약 20만톤으로 추정되는 무상어획할당량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일본어선이 위장으로 북한기를 달고 조업하다가 소련당국에 나포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소련과의 어업협상에서부터 무상어획할당량은 중지되고 말았다. 대신에 여타 외국어선들과 동일하게 일정액의 입어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연간 3만톤의 명태어획할당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북한에서 어획되는 청어와 소련수역에서 어획되는 명태를 상호교환하는 조건하에 3만톤의 특별할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에도 북한은 유상 3만톤 무상 3만톤 합계 6만톤의 할당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류와 생산자재 부족 등으로 원양어선의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할당량의 상당부분을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일본과 북한간의 해양경계 및 어업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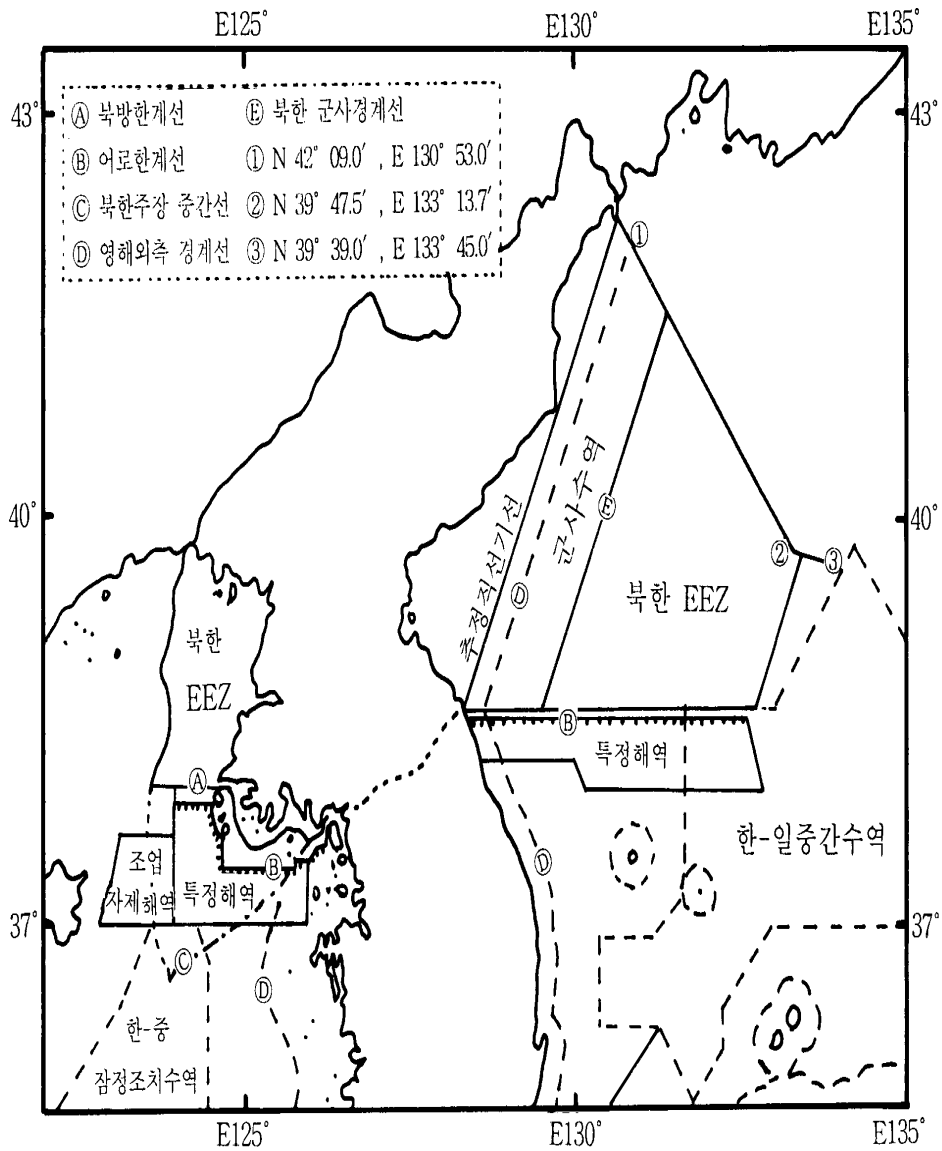
북한이 1977년 동해와 황해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50해리 군사경계수역을 선포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일본은 조업하여 온 기존어장의 확보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sup>24)</sup> 협상의 결과 북한과 일본은 1977년 9월 5

24) 구소련이 1976년 12월 10일 배타적 어업수역법을 제정하고 1977년 3월 1일 배타적 어업수역(EFZ)을 선포한 바 있다. 구소련은 이를 1984년 2월 28일 최고회의 간부회의 포고령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변경하였다. 일본은 1977년 7월 1일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배타적어업수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적용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일본은 이 법률을 1996년 7월 20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EFZ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폐지하고 EEZ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북한이 대응함이 당연한 것이다.



〈그림 3-1〉

동해에서의 북한·러시아·일본간의 어업수역도





일 평양에서 북한의 조선동해수산협동연맹과 일본의 일조어업협의회 간에 민간차원의 ‘일·조 어업협력에 관한 잠정합의서’를 체결하고, 1977년 10월 1일 발효하였다.

제1차 합의서의 내용은 일본 어선들의 활동범위를 동해 북한 군사경계선 외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하며, 어선 규모는 200톤 이하로 정하고 유효기간을 10월 1일부터 1년으로 하였다. 또한 일본은 북한이 어업기술과 기자재 도입에 협력한다는 것과 그 외에도 상대국 어선의 안전보장과 긴급구호 등을 규정하였다.

제2차 잠정합의는 1978년 6월에, 제3차 잠정합의는 1980년 5월에, 제4차 잠정합의<sup>25)</sup>는 1984년 10월 15일에 각각 서명되었고, 제5차 잠정합의<sup>26)</sup>는 1987년 12월 16일부터 1989년 말까지 유효하였다.

1989년 12월에 이루어진 제6차 잠정합의는 북한의 조·일 우호친선협회와 일본의 일·조 우호의원연맹사이에 체결되었으며 1990년부터 2년간 유효한 ‘북조선 200해리 경제수역에 대한 양국간 어업잠정합의서’를 동경에서 합의서명하였다.

1991년 12월에 제7차 잠정합의서가 서명되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그러나 1994년 1월 이후에는 잠정합의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었으므로, 현재까지 양국간 어업협력관계가 중단된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 3) 중국과 북한간의 해양경계 및 어업관계

중국과 북한간의 어업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5) 제4차 잠정합의에 기초하여 범칙행위의 처리를 위한 일·조 민간어업공동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다.

26) 제5차 잠정합의서에서 처음으로 입어로 지불방식이 채택된 바 있다. 이 합의에 의거 일본에 대하여 개방하는 어종은 명태, 연어, 오징어, 게 등으로 하며 양측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명태를 제외하고는 고정된 쿼터를 정하지 않고 어선의 크기와 척수 그리고 어기 및 어법 등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대외적으로 어업을 규제하였다.



황해에 있어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중간선으로 추정되는 ‘바다 반분선으로 경계를 정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계선의 내용을 밝힌 바는 없으며, 수역전체를 군사수역으로 선포하고 있다.



## 제 4 장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추진 실태

### 1. 남한의 수산물 수급 및 수입현황

#### 1) 수산물 수급현황

1990년의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구조를 보면, 국내 총공급 393만톤 중에서 수입이 38만 톤으로 약 10%, 국내 생산이 328만 톤으로 84%, 재고가 6%를 점하고 있다. 이 중 258만 톤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106만 톤을 수출하며 39만 톤을 이듬해에 이월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총공급 455만톤 중에서 수입 수산물이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95년에 46kg까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IMF 경제위기에 처한 1998년에는 35kg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수산물의 소비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구조를 보면 국내 어업생산의 감소와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의 확대 그리고 소득증가에 의한 국내 소비시장의 성장 추세 속에서 소비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의 추이를 보면, 수출이 1990년대에 들어 정체하고 있는 반면, 수입이 급증해 2000년에는 수출이 1411백만 달러, 수입이 1410백만 달러로 되어 있다.

수산물 수출이 감소된 주된 원인을 보면 원료의 확보측면에 있어서 1980년대 중반이후 연근해를 중심으로 고급어종의 자원감소와 함께 원양어장의 축소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쟁상대국가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국내 임금의 상승과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1〉

## 수산물 수급동향

단위: 천톤, kg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국내생산	3,275	2,983	3,289	3,336	3,477	3,348	3,244	3,244	2,834	2,911	2,545
수입	380	554	410	488	792	948	1,205	1,189	753	1,332	1,420
재고	276	290	308	380	360	460	371	427	480	319	582
계	3,931	3,827	4,007	4,204	4,629	4,756	4,820	4,860	4,067	4,562	4,547
국내소비	2,583	2,235	2,327	2,842	3,104	3,215	3,202	3,187	2,394	2,748	2,699
수출	1,058	1,284	1,300	1,002	1,065	1,170	1,191	1,193	1,354	1,232	1,338
이월	290	308	380	360	460	371	427	480	319	582	510
1인당소비	36.2	36.5	40.5	43.3	44.9	46.0	43.7	43.6	34.7	38.3	-
어깨류	30.5	30.4	29.7	31.6	32.5	34.4	34.4	32.0	27.2	30.7	-
해조류	5.7	6.1	10.8	11.7	12.4	11.6	9.3	11.6	7.5	7.6	-
대상어종수	247	219	215	124	96	96	41	29	25	9	5
대상어종수	247	219	215	124	96	96	41	29	25	9	5

자료: 해양수산부

## 2) 수산물의 수입현황

국가별 수산물 수입 실적을 보면 2000년 현재 중국으로부터 487백만 달러가 수입되어 총수입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183백만 달러로 13%, 미국이 145백만 달러로 10.3%, 러시아가 125백만 달러로 8.8%이다. 즉 상위 4개국이 수산물 전체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의 주된 수산물 수입국은 미국이었다. 이는 한국 수산물 수출에 있어 두 번째 순위를 유지하던 맛살의 원료인 명태연육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고, 명란의 주가공원료인 어란의 주된 공급처가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기간 수출용 원료의 수입을 러시아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표 4-2〉

## 국가별 수산물 수입실적

단위: 백만 달러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중국	-	29	40	44	112	129	217	272	197	413	487
러시아	-	134	110	144	176	210	214	176	106	205	125
미국	133	197	154	138	135	144	176	130	84	130	145
일본	35	45	32	40	42	46	59	72	38	107	185
태국	4	9	13	8	28	40	63	68	25	44	68
인도네시아	7	12	11	15	18	16	21	18	16	23	28
아르헨티나	10	44	-	43	50	43	36	31	12	11	9
베트남	-	1	5	9	15	15	13	21	11	40	72
기타	179	105	141	101	150	200	150	257	150	206	292
합계	368	576	506	542	726	843	1,116	1,045	599	1,179	1,411

자료: 해양수산부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정체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이 자유화된 1997년 이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액으로 볼 때 1996년 5%인 59백만 달러에서 1997년 6.9%, 1998년 6.3%, 1999년 9.1%, 2000년 13%까지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 수산물 수입 실적을 보면 2001년 현재 냉동형태의 수입이 물량뿐 아니라 수입액에 있어서도 63%와 4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 활어와 신선냉장물의 수입이다.

1991년을 100으로 볼 때 활어가 수량기준으로 3169, 금액기준으로 819로 증가하고 있다. 신선냉장은 수량기준으로 3619, 금액기준으로 4600으로 증가하였다. 활어와 신선냉장은 가격이 높은 고급 상품이며 무역과 유통 물류 면에 있어서 상당한 신속성을 요구하는 품목으로 국내 소비시장의 성숙된 성장을 전제로 한다.



〈표 4-3〉

## 품목별 수산물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 달러, (%)

		'91	'93	'95	'97	'99	'00	'01
수      량	활어	1 (100)	3 (203)	5 (361)	10 (718)	24 (1771)	35 (2514)	44 (3169)
	신선냉장	1 (100)	2 (167)	6 (620)	7 (698)	17 (1748)	27 (2775)	36 (3619)
	냉동	182 (100)	190 (104)	196 (108)	235 (129)	433 (238)	382 (209)	601 (329)
	필렛-연제품	44 (100)	48 (109)	54 (123)	73 (168)	88 (201)	91 (207)	121 (277)
	건조, 염장, 훈제	0	0	1	2	3	5	4
	갑각류	3 (100)	2 (79)	8 (296)	24 (863)	31 (1149)	44 (1605)	55 (2034)
	연체동물	59 (100)	58 (97)	54 (92)	64 (108)	73 (124)	61 (103)	82 (139)
금      액	활어	16 (100)	25 (156)	27 (169)	39 (244)	71 (444)	116 (725)	131 (819)
	신선냉장	2 (100)	10 (500)	36 (1800)	40 (2000)	49 (2450)	80 (4000)	92 (4600)
	냉동	255 (100)	236 (93)	316 (124)	369 (145)	578 (227)	603 (236)	714 (280)
	필렛, 연제품	124 (100)	90 (73)	127 (102)	163 (131)	144 (116)	147 (119)	182 (147)
	건조, 염장, 훈제	1	2	5	9	7	24	16
	갑각류	19 (100)	19 (100)	68 (358)	113 (595)	77 (405)	139 (732)	174 (916)
	연체동물	97 (100)	86 (89)	116 (120)	126 (130)	118 (122)	121 (125)	156 (161)

자료 : 해양수산부

활어의 경우 수입 어종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어종은 참돔, 농어, 민어 등이다. 활어는 수송문제에 있어 발주와 도착 그리고 판매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5일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다. 따라서 수입이 항공을 이용한 소량수송을 제외하고는 여건상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본으로부터는 참돔, 농어와 같은 높은 가격의 고급



어종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민어류와 같은 비교적 중저가의 대중 어종이 수입되고 있다.

신선냉장도 활어와 같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어종으로는 명태, 갈치, 연어, 대구, 복어, 아귀 등으로 연어를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소비되어 왔던 대중 어종이다. 특히 수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품목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명태와 갈치이다.

냉동은 대부분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에 따른 외국 어장 상실을 대체하는 성격의 수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북양어장 상실에 의한 대구와 명태, 그리고 그 부산물인 명란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냉동조기를 중심으로 하는 근해어종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필렛과 연제품의 수입도 냉동어류와 같이 200해리 EEZ설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 명태, 가자미류, 대구류의 연제품과 필렛수입이 중심을 이루며 그 외에도 갈치, 조기와 같은 근해 어종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건제품, 염장품 및 훈제품의 수입은 국내 가공원료의 부족과 가공업 노동조건 악화에 영향을 받아 건명태, 건멸치 등 소위 대중적 가공품으로 수입되는 품목과, 연어 훈제품과 같이 고급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수량과 금액에 있어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다.

갑각류는 주로 고가적인 게류, 새우류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국내 소비시장의 고급화와 외식시장의 확대에 의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체동물은 수입의 규모는 작으나 최근 증가하는 어종으로서 낙지, 갑오징어, 문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국내 외식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안정적인 물량의 확보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조건인 외식산업에 있어 수입 연체동물의 시장비중도 높아가고 있다.

이외에도 피조개 등의 패조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원자재 성격의 수입으로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

수입자유화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은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수출입 면허제, 수입할당제, 수입 금지 품목의 설정 등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수입을 허용하는 품목도 수출용 원자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수출용 원자재를 가공 후 재수출함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여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1990년 수산물 용도별 수입실적을 보면, 수출용 원자재 형태의 수입금액이 47.0%, 외국과 어업협력에 의한 수입이 24.7%, 그 외 내수용이 28.3%이었다.

그러나 수입 자유화에 따른 관세 인하와 국내 생산의 감소 그리고 국민 소득의 증가라고 하는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2001년에는 수출용 원자재 형태의 수입이 11.8%, 외국과의 어업협력에 의한 수입이 0.8%인 반면, 내수용이 87.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2.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현황

### 1) 북한산 수산물의 반·출입 제도

북한주민접촉 승인은 교역업체가 남북한 수산물 교역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거래 협의를 위한 의사교환을 북한측과 직접 행하든지 혹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하든지 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교역추진과 관련하여 북한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북한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측으로부터 받은 신변안전보장각서가 첨부되는 초청장 등을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간을 이동하는 모든 물자는 소유자, 원산지, 품목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반출입 승인이 필요하며, 다만 포괄승인품목에 한해서는 반출입 승인 없이도 세관통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산 반입수산물의 통관은 일반수출입품의 통관절차를 준용하고 있지만, 제3국을 단순 경유한 것을 포함하여 남북한간 교역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되므로 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에 관한 심



사가 엄격하다.

북한의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또는 ‘조선무역은행’ 등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대부분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산하의 지역 상품검사소에서 발급받고 있다.

제3국을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반입 신고에 있어, 북한~제3국·제3국~남한의 선하증권 일체 및 선박항해일지 등에 대신하여 제3국 세관 등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발행한 단순경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해 반입시 ‘승인을 요하는 품목’과 ‘포괄승인 품목’으로 구분되어 반입된다. 포괄승인품목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서가 없이도 세관통과가 가능하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에서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현재 미꾸라지(활어), 홍어(냉동),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가리비(냉동), 오징어(냉동), 낙지(냉동), 꽃게(활·신선), 꽃게(냉동)의 8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반입제한 조치는 국내 어업인의 보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그 목적이다.

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와의 사전협의 후 반입물을 동 공사에 인도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에 대한 제한으로서는 전술한 ‘고시’ 이외에도 수출입공고 등에서 거래 방식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 2)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현황

북한산 수산물의 연도별 반입실적을 보면, 반입이 시작된 1989년에는 17만 달러 수준으로 극히 적었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4,000만달러를 상회하였다.

반입건수에 있어서도 1996년 214건에서 1997년 357건, 1998년 536건, 1999년 1,47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공처리형태를 보면 1996년 이전에는 냉동수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활선어와 해조류는 일부에 불과하였다. 가공품의 경우에도 1996년 이전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186만 달러에 달하였고 1999년에는 744만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품목별로는 건제품, 통조림, 염신장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건제품은 1991년에 처음 마른오징어가 반입된 것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이후 품목이 다양화하여 마른해삼, 마른우뿔가사리, 마른미역, 마른명태포, 마른바지락, 마른다시마, 마른까나리 등이 반입되고 있다. 통조림 반입을 보면 1996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여, 1997년 170만 달러, 1999년 494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염신품은 염신어패류와 염신어란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염장품에는 염장게알, 염장바지락, 염장굴, 염장오징어, 염장해삼 등이 있다.

수산물 품목별로 반입 현황을 보면 <표 4-4>와 같다.

&lt;표 4-4&gt;

북한으로부터의 수산물 반입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명 태	123	316	85	339	2,583	1,120	574	580	797	1,146	821	2,710
복 어	133	610	593	3,132	328	2,064	531	2,336	315	1,678	137	988
바지락	26	35	1,324	906	1,852	1,698	3,142	3,386	7,181	6,208	13,599	11,562
백 합	385	432	500	574	120	237	130	288	164	361	129	182
우렁이	34	33	49	244	143	1,015	4	4	6	16	310	594
문 어	345	812	1,150	2,945	2,366	6,281	629	1,187	1,279	2,199	1,720	3,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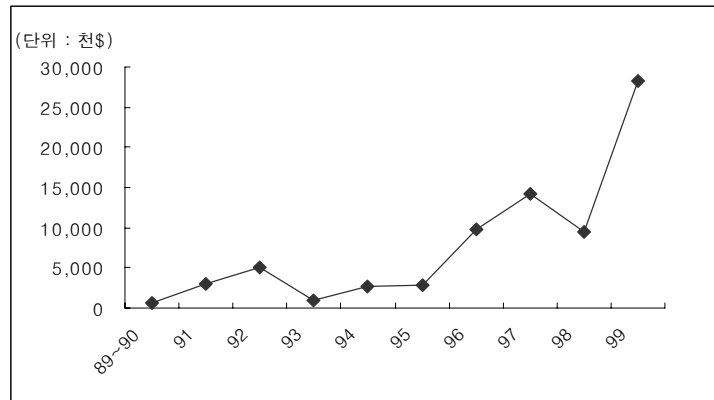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통일원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 물량과 금액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바지락이며 그다음은 문어와 명태라고 볼 수 있다. 복어의 경우는 1997년과 1998년에 다량 수입되었으나 최근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4-1〉

남북한간 수산물 반입 추이



1994~1997년간 물량이나 금액 면에서 문어가 가장 많아 3,888톤에 10,114천 달러가 수입되었고, 그 다음 명태로 5,374톤에 3,080천 달러이며, 복어는 1,054톤에 5,806천불이고, 백합은 2,723톤에 3,491천불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의 수산물을 북한에 반출하기도 했는데 1997년 경우 전체 금액이 26만 달러에 불과했다.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은 1996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24,633톤에 4,2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반입액의 27%를 점유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앞으로 외화획득을 위한 교역상대국으로서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입에 대한 제한은 국내생산어업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8개 품목만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연간 반입 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하는 품목은 꽃게, 냉동가리비, 냉동낙지 3개품목이다. 꽃게는 7~8월에 반입을 제한하며 반입제한량은 300톤이고, 냉동가리비는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반입을 제한하며 반입제한량은 400톤이며, 냉동낙지는 200톤으로 물량만을 제한하고 있다. 연간 한도물량의 범위 내에서 반입량을 통일부에서 임의승인



하고 있다.<sup>27)</sup>

매년 북한산 반입량은 큰 변동을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내수경기, 환율변동, 주요 반입어종의 남북한 어황 변동, 중국의 수출가격 변동 등의 요인과 함께 남북한 정치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2000년에는 국내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정치관계의 호전에 힘입어 반입 규모가 증가하였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6년 이후 4년 동안 대표적 반입어종은 명태, 복어, 문어, 게, 바지락, 가리비, 어란이었으며, 이들 7개 어종은 동기간 총반입량 가운데 건수기준으로 60.4%, 수량기준으로 83.6%, 금액기준에서 68.4%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이들 7개 어종의 점유율은 1996년도 85%수준에서 1999년도 60%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반입어종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년도별 반입어종(해조류 포함)의 수를 보면 1996년 15개 어종, 1997년 25개 어종, 1998년 34개 어종, 그리고 1999년 45개 어종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5〉

제품 형태별 반입 수산물

단위 : 톤, 천달러

품목	1996		1997		1998		1999		200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냉동품	615	3,598	2,999	3,298	107	344	5,823	4,520	2,924	6,094
냉장품	27	126	34	216	520	544	807	1,708	492	1,057
가공품	2,882	5,177	4,842	9,291	5,395	8,132	12,362	17,002	19,672	27,055
활 어	-	-	0.085	1	1	37	7	72	26	209
합 계	3,525	8,901	7,874	12,806	6,023	9,057	18,999	23,302	23,114	34,415

자료 : 해양수산부, 통일원

반입어종의 다양화와 함께 동일 어종내에서도 제품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2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 통일부 고시 제3조



제품형태를 냉동품, 냉장품, 가공품, 활어로 구분할 때, 반입에 있어 냉동품 및 활어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냉장품 및 가공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입 1건당 평균물량 및 금액을 보면, 1996년의 경우 각각 17.5톤 및 45.6천 달러이던 것이 1999년에는 각각 13.6톤 및 192.2천 달러로 감소 추세에 있다. 단위 반입규모의 소형화와 수량의 소량화는 전술한 7대 주요어종에 비해 단위반입량이 적은 기타어종의 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액의 소형화는 7대 주요어종의 평균가격 저하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견 반입업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7대 주요어종의 반입은 장기간에 걸친 거래관계에 의해 거래 위험감소와 현지 수집활동의 효율화를 통해 반입가격을 하락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산 수산물 반입사업의 신규참가자들은 7대 주요어종의 취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어종·품목을 취급하게 되며, 그 결과 사업자 자체가 투기성을 갖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유입과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4월 현재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산물 반입사업체 수는 54개 업체였으나, 실제조사를 시도해 본 결과 조사불가능한 사업체가 약 70%인 37개 업체에 달하였다.<sup>28)</sup>

### 3. 민간부문 투자협력사업의 추진사례

#### 1) 북한 현지의 투자관련 제도

북한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협력사업은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sup>29)</sup> ‘합영사업’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28) 한편, 2000년 8월 현재 한국 무역진흥공사 전산자료에 입력된 반입사업체수는 195개 업체로 파악되었는데, 양기관 자료상의 업체수 격차는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승인 여부에 크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많은 업체들이 제도적 요건 조차 갖추지 않고 단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29)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이외에 외국인기업의 형태가 있다. 외국인기업은 외국인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설립가능지역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되어 있다. [http : //www.kotra.or.kr/main/info/nk/base/main6.php3](http://www.kotra.or.kr/main/info/nk/base/main6.php3)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사업방식을 말한다. ‘합작사업’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단독 경영하는 방식과 남한이 단독 투자하여 단독 경영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합영사업은 대우의 민족산업총회사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합작사업은 LG·태영수산의 가리비양식분야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이 단독 경영하는 형태로 운영된 바 있다. 기타 지원성 협력사업이 농업·의료분야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대의 금강산개발은 남측기업이 최초로 단독투자·단독경영 형태의 합작사업이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발표하면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유치된 자본의 대부분이 재일 조총련계기업으로 이른바 朝·朝합영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경제협력체제 붕괴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투자법규를 정비하는 등 내부적인 준비 작업을 서둘렀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해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하고 국내에서 투자포럼을 신설하는 등 활발한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으나 투자유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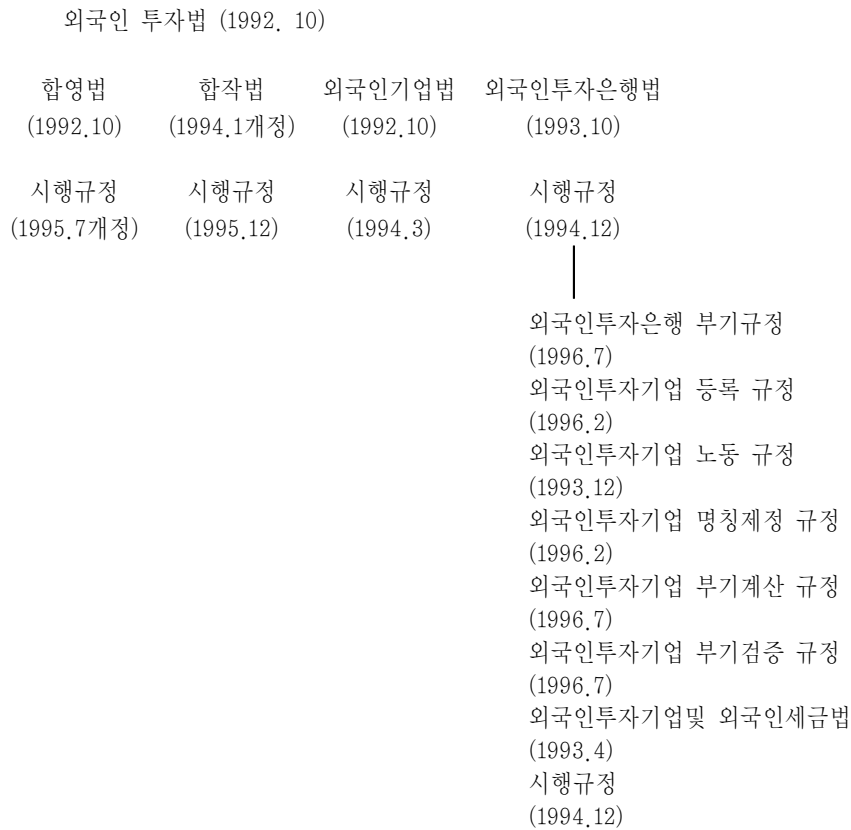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는 모법인 ‘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투자기업의 형태에 따른 법규, 투자기업 운영에 관한 법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관한 법규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투자기업 형태에 따라서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과 각각의 시행규정이 있으며, 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해서는 세금법, 외환관리법, 토지임대법과 각각의 규정이 있으며, 그밖에 노동규정, 부기계산규정, 등록규정, 출자규정, 기술도입규정 등이 있다.



〈그림 4-2〉

## 투자관련 법령체계도



## 2) 북한 현지투자사업의 실현사례

## (1) 미흥식품

미흥식품은 중국의 ‘미영기업유한공사’와 공동으로 북한의 ‘조선철산주식회사’와 사업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어패류채취 및 수산물 가공산업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시작하였다. 1998년 3월 13일 통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취득하여, 1998년 7월에 평안남도 남포지역과 황해도 해주지역을 답사한 바 있다.

본 사업은 수산물 가공수준이 낮은 북한에 가공기술을 제공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효과가 기대되었다. 북한내 현지법인의 명칭은 ‘조·중 합영철산수산회사’로서 북한 평양시에 주소를 두고 평안남도 남포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사업진행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것을 계획하였다.

당초의 투자계획을 보면, 수산가공분야에 중점을 두고 가공사업의 경영권은 북한측이 갖고 판매권은 남한측이 갖도록 합의하였다. 총투자액은 48만 달러이며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을 예정하였다.

시설규모는 영하 40° 5톤급 급속냉동기 2대, 디젤발전기 40 kw 2대, 냉동실 60㎡ 2조, 120㎡ 냉장고 3조, 새우젓 가공시설을 구비하도록 예정되었다. 가공시설의 운영은 남측에서 5명을 파견하고 북측의 기술자를 포함하여 10명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작업인력은 100명을 예정하였다.

어로부문에는 잠수기와 꽃게 자망을 투자하고, 양식부문에는 우럭과 뱀장어 그리고 백합 및 전복 등의 바닥식 양식사업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측의 파트너 교체로 인해 별다른 사업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 (2) 태영수산

태영수산은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참가리비양식분야의 전문기업으로, 국내 가리비 총생산량의 20% 수준을 생산하고 있다. 향후 강원도 연안어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개척지인 북한의 동해안수역에 가리비양식업 진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북사업에 착수하였다.

1996년부터 남한측 대기업인 LG상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대북가리비 양식사업 관련합의서를 교환하였다. LG상사가 자본을 투자하고, 태영수산은 양식기술을 제공토록 하였다. 그 해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사업의향서를 체결하여 북한은 어장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997년 10월 14일 통일원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취득하여, 1998년 4월에 가리비양식 기자재 1차분, 1998년 6월에 2차분을 북한으로 반출하였다. 그 해 9월에는 ‘라진수산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회사의 형태는 유한책



임회사로서 이사회가 최고의결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사회는 남측이 3명 북측이 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사회 의장은 북측이 사장은 남측이 담당하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사업계획을 보면 총투자액은 당초 200만 달러에서 85만 달러로 감소되었다. 이는 남한측이 당초 투자를 희망한 원산지에서 북한측의 사정으로 함경북도 나진 소초도 연안으로 투자지역이 변경되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투자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북한이 20만 달러, 남한이 65만 달러였다.

생산목표는 연간 500톤 200만 달러로 정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생산한 양식물의 가공은 물론 자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도 수집하여 가공하고, 어구어망사업까지를 포함하였다. 수집된 수산물의 북한내 판매는 라진 수산합영회사가 담당하며 해외시장의 판매는 남측이 담당하였다. 본 사업도 1999년 이후에는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

#### 4. 남·북한 공동어로사업의 추진사례

##### 1) 민간기업의 공동어로사업 추진사례

###### (1) (주)해주의 합작입어사업

남측의 (주)해주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의 ‘광명성총회사’를 사업 파트너로 하여 북한의 서해수역에서 공동조업을 하고, 어획물을 전량 반입하여 판매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1997년 12월 중국 연변에서 북한의 ‘조선총국청진무역상사’와 접촉하여, 1998년 10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의 광명성총회사를 북한측 파트너로 선정하고 사업의향서를 교환하였다.

1998년 10월에 남북 양측이 공동 투자하는 ‘풍어수산합작회사’를 평양에 설립하고, 동년 11월 통일부에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하여 1999년 2월에 사



업자승인을 획득하였다.

사업방식은 (주)해주가 어로작업에 필요한 선박, 장비, 기자재, 포장재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획물의 판매와 운송을 담당하고, 풍어수산주식회사는 어업 허가의 제공, 어획물 보관, 현지 선원고용, 어획물 전량을 해주에 인계하는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주)해주에서 어선(저인망 3척, 운반선 1척)과 시설장비(냉동창고 1식, 냉동차량 2대 등)를 외상 제공(수출)하고 조기, 홍어, 가자미, 광어, 갑각류 등 어획물을 북측 60%, 해주 40%로 배분하여 남한으로 전량을 반입·수출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하였다.

투자금액은 397만 달러로 예정되었으며 남측이 75% 북측이 25% 비율로 5년 기간으로 합작투자가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내 조업구역이 서해안 군사분계선 이북의 북위 38.5° ~ 39.5°에 이르는 연안해역이었고 조업하고자 하는 어종이 회유성 어종으로서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서해안의 남측 어업인들의 반대가 있었다. 따라서 통일부는 이를 감안하여 2000년 8월 16일로 사업승인을 불허하였다. 본 사업은 2000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 (2) 안승유통의 북한 동해수역 붉은대게 조업 추진

안승유통에서 북한에 붉은대게잡이 수출용 감척어선 10척과 약 15억원 상당의 어구·장비 등을 제공하고, 우리 기술자를 승선시켜 원산~장전해역에서 붉은대게 연간 3만톤을 어획하여 10년동안 반입, 수출용 원자재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차례에 걸쳐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감척어선의 구입목적이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붉은대게가 수출용이기는 하나, 저가 및 무관세로 대량 국내에 반입될 경우 어가하락이 우려될 수 있다는 국내 강원·경북 계통발 어업인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통일부에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 2) 어업인단체의 공동어로사업 추진사례

### (1) 전국어민총연합회의 북한수역 입어 추진

전국어민총연합회는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파트너로 하여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어장을 제공하고 전국어민총연합회 어선들이 지정된 북측어장에 입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어획물에 대한 이익은 50 : 50으로 배분하는 것을 합의하고 동사업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동해안 어업인의 반발과 국내 어업인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접촉승인 유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 접촉과 협의를 추진하였으므로, 통일부는 사업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동 사업은 북측이 제공하고자 하는 북한수역의 어장성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남측어선 및 선원의 신변안전 보장장치의 미흡,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시작부터 사업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2) 수협중앙회의 합작입어사업 추진

남측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북측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또는 해당기관)가 공동으로 합영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 운영하되, 수협중앙회는 어선, 어구자재 등을 제공하고 북측은 어장, 선원을 제공하여 북측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작사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어선 5~10척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어장성에 따라 투입어선의 종류 및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어획물은 남측으로 반입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여 판매대금에서 제비용 공제후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1998. 5. 28~2000.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 양측이 협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에서 선박 4~5척 및 운영기금을 우선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보장도 불투명하여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 3) 북측이 제안한 동해북부어장 공동어로사업

북한은 북한측 동해북부어장 일부를 남한에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공식 제의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내 금강산지구에서 개최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2000. 12. 16) 합의사항으로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대표 기조연설(2000. 12. 26)과 수산성 담화(2001. 1. 13)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북한의 제의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은 북한이 제공하려는 동해 북부어장에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함으로써 상호간 이해증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동 사업을 계기로 남북간 수산협력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측제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제안한 북측 어장의 정확한 위치와 조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제의수역이 북측 영해기선 이원수역 200해리 외측으로 수심이 2,500m ~ 3,000m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바, 동 어장의 경제성과 국내어업인의 조업용이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어장의 경제성·조업 용이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검토되고 있다.



## 제 5 장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발전방안

### 1. 북한의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 추진과 북한의 변화

#### 1)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1)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

북한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sup>30)</sup> 위기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실용주의적 개혁노선과 이데올로기적 보수노선 간에 정책갈등을 겪어 왔다. 그 동안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경제위기 → 정책갈등 → 체제변화 라는 역사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sup>31)</sup>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내적인 한계와 자립경제노선의 추구에 따라 야기된 것이다.

1990년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비효율성, 사회주의권 붕괴로 대변되는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후퇴를 거듭하여 왔다. 북한의 경제여건 변화를 총량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국민총소득(GNI)은 1990년 당시 230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68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30) 이태섭,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1996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에 3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31)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인제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체제변화에서 당의 지도를 우위에 두는 정치화된 이데올로기 사회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체제변화에서 당과 국가의 상위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사회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1〉

## 남한과 북한의 국민소득 추이

단위: 억달러, 달러,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명목 GNI											
북한(A)	231	229	211	205	212	223	214	177	126	158	168
남한(B)	2,523	2,949	3,143	3,452	4,017	4,881	5,183	4,740	3,168	4,021	4,552
(B)/(A)	10.9	12.9	14.9	16.8	18.9	21.9	24.2	26.8	25.1	25.5	27.1
1인당 GNI											
북한(A)	1,142	1,115	1,013	969	992	1,034	989	811	573	714	757
남한(B)	5,886	6,810	7,183	7,811	8,998	10,823	11,380	10,307	6,742	8,581	9,628
(B)/(A)	5.2	6.1	7.1	8.1	9.1	10.5	11.5	12.7	11.9	12.0	12.7
경제성장률											
북한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남한	9.0	9.2	5.4	5.5	8.3	8.9	6.8	5.0	-6.7	10.7	8.8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이러한 총량지표의 급격한 하락 추세는 극심한 식량 및 에너지 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도 1990년대 들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1989년 48억 달러의 대외무역 규모는 1999년에는 13~14억 달러 수준으로 70% 이상의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경제운용은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호적 사회주의국가들을 대상으로 대외시장을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자립경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여 왔다.<sup>32)</sup>

북한식 자립경제의 한계는 대외교역관계가 매우 취약하였다는 점이다.<sup>33)</sup>

32) 최영옥,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1997년 제2호, 17쪽

33) 이태섭,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8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1996, 5~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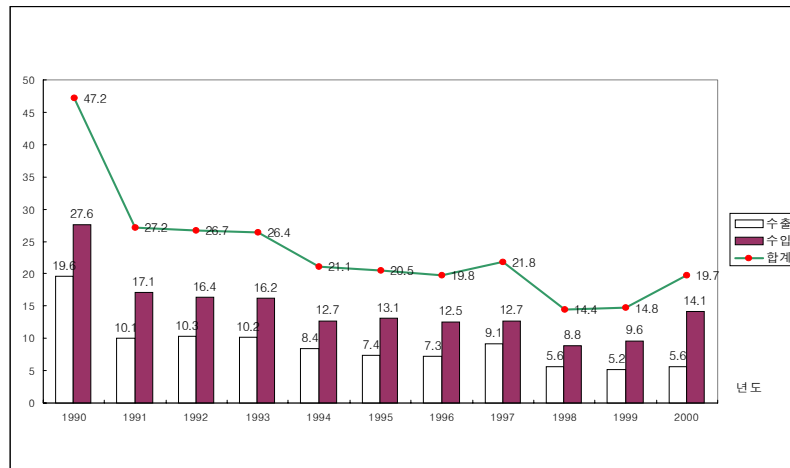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성장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무역의존도가 증가되면 경제성장이 증가하고, 무역의존도가 감소하면 성장이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비교적 낮은 상태이다.’



〈그림 5-1〉

##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 억달러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

주요 전략물자인 원유·생고무·코크스 등의 기본 원자재를 무역에 의존하여 왔다. 특히 북한의 에너지 구조에서 원유는 10%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원유부족이 경제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경제위기에 따른 교역량의 급격한 감소는 북한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었고, 이것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간 계속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조치도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sup>34)</sup>

북한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내부적 정책 등이 야

34)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인제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긴장의 고조는 북한의 안보불안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방비 부담의 과다는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작용을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함으로써 심각한 안보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국방비부담은 더욱 더 가중되었다.



기되었다. 1990년대 정책갈등은 시기적으로 3단계를 거쳐 정리될 수 있다.<sup>35)</sup> 1990년대 후반기의 정책갈등은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보수노선의 공세로 표출되었다.<sup>36)</sup>

북한체제에서는 모든 정책이 이데올로기적 사상이론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북한의 모든 정책과 리더십은 이른바 독창적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당화된다. 따라서 당시의 개혁노선에 대해서는 기회주의적 입장으로 비판·매도되고 있었다.<sup>37)</sup> 결과적으로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은 경제에 대한 정치우위를 확립한 주체사상에 의해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구도는 김정일 세습체제가 정리되면서 재정립되었다. 김일성 사망후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책갈등의 양상과 논란 속에서 정리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sup>38)</sup>

#### 35) 앞의 책

‘제1단계는 제3차 7개년계획이 추진되던 1993년까지 기간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실용주의 개혁노선이 대두되었다. 제2단계는 1997년까지 기간으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에 따른 경제정책의 변화, 중공업우선에서 농업·경공업우선으로 전환, 자연재해에 따른 위기심화와 김일성 사망에 따른 혼란 등 실용적 개혁노선이 확산되고 정책갈등이 심화되었다. 제3단계는 1998년이후 시기로서 김정일 체제의 권력기반이 공고하게 구축되면서 사회주의적 강성대국론과 북한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적 보수노선을 기본축으로 실용주의 개혁노선을 제압하고 권력체제를 재정비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었다.’

#### 36) 황장엽, “황장엽의 비밀편지”, 월간조선특별부록, 1997년 3월호, 100쪽

‘당시 황장엽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이후 개혁노선은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과 변절, 제국주의로의 투항, 기회주의적인 사상적 분열로서 비판받았으며, 이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에 도전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보수노선은 소위 ‘붉은기 철학’으로서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 37) 이명호, “경제관리와 경제제도의 연관을 부인하는 기회주의적 견해의 반동성”, 경제연구 1998년 제1호, 49~52쪽 참조.

‘북한의 원칙적 입장은 사회주의(집단주의) 경제 제도는 사회주의적(집단주의적) 방법에 의해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기회주의적 견해는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에 현혹되어 경제제도와 경제관리방법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자본주의적 관리방법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 38) 당시 정책갈등을 야기하였던 주요 문제들을 정리하면, 중공업과 경공업의 우선순위 문제,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문제, 생산과 교환 그리고 분배에 있어 유인적 가치법칙을 강화할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갈등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정책갈등이 정리되고 체제의 재정비를 이룩한 1998년 이후 김정일의 경제정책 구도는 독특한 것이었다. 이는 경제회복 보다는 체제수호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기존의 북한식 계획경제와 자립경제를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이후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자립 경제를 복원하여 재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제도·리더십 등 체제를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대외교역 문제에 있어서는 무역개방을 중시하는 입장<sup>39)</sup>과 대외무역에 치중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입장<sup>40)</sup>이 다소 대립하였다.

## (2) 북한의 대외개방과 경제개혁 정책

김정일은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립 경제에 모순되지 않으며, 반대로 대외무역은 경제적 자립성을 공고히 하고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중요한 담보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1)</sup> 북한은 경제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 관계를 이용해 왔다. 자립 경제에 바탕한 제한적인 개방 경제의 추구이지만, 북한의 자립 경제 노선은 대외경제 관계의 확대

39) 조강일, “무역제일주의 방침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 방침”, 경제연구, 1994년 제2호, 12쪽.

‘오늘 국제 경제 무대에서는 개별적 민족 국가들의 세계적인 경제 연계가 날을 따라 더욱 더 밀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나라들이 국제 경제 교류와 대외 무역에 보다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매개 나라들의 경제 발전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지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대외 무역의 장성 속도는 공업 총생산액 장성 속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산업에서 창조한 소득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당의 무역제일주의는 자립경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40) 리민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쌓아 올리신 자립 경제 건설의 역사적 공적과 그 영원한 생명력”, 경제연구, 1997년 제2호, 7쪽

‘북한의 자립 경제는 세계 다국적 기업이 이식하는 수출산업에 기대를 걸지 않으며,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국제화와 상호 의존성에 명줄을 걸고 있는 살림살이와 결코 인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자립 경제를 포기하는 것은 곧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노동신문」,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1998년 9월 17일.

‘인민 생활을 높인다고 하면서 중공업을 소홀히 하거나, 외화가 있어야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대외 무역에만 치중하는 것이라고 옳은 방도로 될 수 없다.’

41) 김정일, “당과 혁명 대외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1986. 1),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344쪽.



발전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자립 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여전히 북한은 경제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보완적 수단으로 대외경제관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단지 그 기본 대상이 사회주의 시장 붕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본주의 시장으로 대체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물론 나진·선봉지대 개방 등 자본주의권과의 관계 확대는 매우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다.<sup>42)</sup>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는 1980년대 후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자본주의권과의 경제 협력 수준이 종래 사회주의권과의 경제 협력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권과의 경제 관계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자본주의권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했을 뿐인데, 이것이 마치 북한의 자립 경제가 개방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아닌지...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다른 나라에 손을 내미는 쉬운 길이 아니라 제 힘으로 살아나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며, “자주, 자립의 원칙을 앞으로도 철저히 고수해 나갈 것” 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sup>43)</sup>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들어 1980년대에 비해 대외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더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대외 개방을 확대했다고 과연 평가할 수 있을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어떤 형태의 체제를 고수하든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 한 경제적 성과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이 의도하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였던 이유를 보면, 국내 정치적 요인, 대외외교적 요인, 국내 내부적 요인으로 정리된다.

첫째, 북한은 국내 정치적으로 본격적인 개방으로 인해 초래하게 될 체제불

42) 오승렬,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 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116쪽. 오승렬은 북한이 나진선봉지대를 대외경제의 연결 ‘창구’ 보다는 북한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창고’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43) 근로자, 2000년 제5호, 15쪽.



안을 우려<sup>44)</sup>하여 개방과 개혁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최근까지 북한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된 국교단절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sup>45)</sup>되어 왔다. 남북관계는 정상회담이전까지는 대결과 반목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기 어렵고 실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셋째는 북한의 국내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장기간 계속된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생산의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sup>46)</sup>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북한에 투자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체제를 개방에 적합하도록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체제전환의 비용의 부담도 만만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더라도 체제위험의 요인이 커지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환속도를 조정하면서<sup>47)</sup> 점진적으로 지그재그식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경제운용의 관리방식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들이 조금씩이나마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이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원칙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식 계획경제 시스템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운용의 기본골격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

44) 김정일의 권력이란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김일성의 경제정책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극단적으로 보면 김일성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또한 개혁과 개방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상의 유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북한체제에 근간을 이루는 주체사상에 대한 손질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의 현재 권력구조와 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를 갖고 있다.

45) 특히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벽에 부딪치고 있으며, 일본과의 수교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쉽게 완화될 가능성이 없으며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도 실현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46) 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자재난으로 인해 물가조달도 어려웠고 기계설비는 낙후된 상황이었다. 또한 북한의 내수시장도 어려운 형편이 계속 되어 왔다.

47) 일각에서 주장되는 급진적 개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개방을 위한 외교적 요인과 국내 경제적 요인의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급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

남북정상회담<sup>48)</sup>의 의의는 분단 55년만에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여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상호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성화, 당국간 회담개최 정례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남북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개최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이 8차에 걸쳐 남북을 오가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 활성화,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전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협력합의서<sup>49)</sup>를 2000년 11월에 채택하였다.

48) 국민의 정부는 대북화해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9일 베를린선언<sup>1)</sup>을 통해 남북대화의 재개를 제의하였으며, 이에 북측은 특사접촉을 제안하여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합의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15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49) 경제협력관련 4개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발효가 되지 못하고 있다. 4개 합의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투자보장’은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송금·출입·채류 등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청산결제’는 청산결제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신용한도 설정 및 결제은행 지정 등을 규정하고 청산결제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인 일반결제방식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중과세방지’는 사업소득, 이장, 배당, 로열티 등 과세대상 소득별로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규정하여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조세정보의 교환, 조세관련분쟁의 해결방법을 명시하였다. ‘상사분쟁해결’은 공동분쟁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한당국이 ‘남북당국 자간 어업협력 회담’을 제의하였고 북측은 남측에 동해어장의 일부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협의가 계속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2002년 10월 19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측 어민들의 북측어장 일부 이용 문제와 관련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하여 남북간 수산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우리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전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기본이념과 체제 측면에서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대남 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있어서는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7년 6월에는 시장환율 적용, 지대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독립채산제 실시, 주민들의 자영업 허용 등 개혁조치를 실시하여 투자여건 제고를 도모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외무역 활성화 및 경제개방 확대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이후 매년 1월 28일을 ‘무역절’로 설정하였는가 하면 1998년 3월에는 ‘무역법’을 제하는 등 대외무역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다.<sup>50)</sup>

비공식 경제부문에서는 경제난으로 물자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실상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농민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sup>51)</sup>

50)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편입 노력을 적극 전개해 오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획득을 포함한 대·미·일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교섭에 주력하는 동시에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접촉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분야 관계자들을 미국, 중국, 호주 등지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51) 1958년 농업협동화 및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된 이후에도 명맥을 유지해 오던 농민시장은 1990년대 들어 식량 및 생필품 부족현상 심화로 인해 공식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존차원의 수요에 의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어 왔다. 북한 주민들은 1999년 현재 필요한 식량 및 생필품의 60~70% 정도를 농민시장을 통해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여 집단적 소유와 중앙집권적 통제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경제정책과 경제관리에 있어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신사고운동을 통한 실지부문의 강조를 통해 의식개혁을 도모하고 있으며<sup>52)</sup>, 자력갱생의 방법론을 폐쇄적 개념에서 개방적으로 바꾸는 경제정책을 모색하고 있고<sup>53)</sup>, 경제관리에 있어서 교조적 사상정보다는 효율성과 수익성에 따른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sup>54)</sup>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외화 획득을 위해 종래의 폐쇄적 자력갱생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는 개방적 노선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외무역의 추진에 있어서도 종래의 국가간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12여개의 무역상사를 통해 기업간 거래방식으로 발전하였다.

2001년에는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등을 제정하여 대외교역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2002년 7월부터는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적 요소가 가미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초기 개혁정책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서 농업·무역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내용을 보면, 기업경영에 있어 당간부가 행사하던 경영권을 지배인에게 이양하고 국가에 납부하던 감가상각금과 초과이익을 기업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하고 있다.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사무직을 축소하고 잉여인력을 생산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던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 임의로 개간·경작할 수 있는 토지 규

52) 노동신문 사설, 2001년 1월 9일, ‘낡은 관념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모든 일을 새맛이 나게 해 나가야 한다. ... 경제조직사업에 있어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인민들이 실제적으로 덕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53) 노동신문, 2001년 1월 28일, ‘오늘의 자력갱생은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4)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 2001년 4월 5일, ‘실리가 나지 않는 공정들을 대담하게 털어 버리고 투자의 효과성을 늘려야 한다.’



모를 400평까지 확대하고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하여 개인영농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종래 국가에서 무상에 가깝게 배급하던 것을 주민들이 식량 배급소와 국영상점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 2. 남한의 수산부문 경제협력사업 추진방향

### 1) 남한의 대북경제협력사업 기본방향

최근의 대북 정책은 화해협력 또는 포용정책<sup>55)</sup>(engagement policy)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룩하고 평화와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7·4남북공동성명(1972), 유엔동시가입(1991), 남북기본부속합의서채택(1992) 등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평화공존정책들도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되어 오는 정책이다.

남측은 궁극적 목표인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국민적인 합의과정을 통하여 1989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자주와 평화 그리고 민주를 통일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화해협력 → 남북연합<sup>56)</sup> → 통일국가의 단

55) 통일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1. 12., 4쪽

‘남한측 대북 정책의 기본방향은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평화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56) 통일부,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2002. 5., 10쪽

‘남북연합이란 현존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정부간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평화공존을 전제로 하면서 사회 각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통일국가의 궁극적인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1체제 1정부 1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한의 체제차이와 이질성을 감안하여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적인 중간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남북연합에서는 2체제 2정부 일지라도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공사무처 등 남북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계를 거치는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연합의 과정을 통해 분단상황 하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통일국가의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려는 것이다.<sup>57)</sup>

통일을 향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첫째는 남북한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둘째는 전쟁방지와 긴장완화, 셋째는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 넷째는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형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sup>58)</sup>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를 기반으로 통일국가의 달성을 위한 제도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폐쇄사회를 유지하는 한에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sup>59)</sup>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게 된다면,

57) 통일부, “통일과정에서 본 우리의 대북 정책”, 2001년 10월, 3쪽

‘북측의 통일방안은 1980년부터 고려연방제를 주장하여 왔다. 이는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1연방국가로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0년 6월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통일달성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과도기적 중간단계를 설정하였으며, 남북 정부가 각기 내정·군사·외교권을 갖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토록 하고,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先민족통합 後제도통일 방식의 접근을 모색하고, 남북한간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다. 남측의 연합제 입장에서는 「남북연합기구」이며,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입장에서는 「민족통일기구」로 각기 명명하고 있다. ‘

58) 통일부, ‘통일과정에서 본 우리의 대북정책’ 2001. 10. 5~7쪽

‘첫째 남측과 북측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상호인정과 존중의 입장을 마련하였고,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이를 본격화하였으며 관계개선을 논의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쟁방지와 긴장완화이다.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군사사항들에 합의하였다. 또한 2000년 9월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긴장완화의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셋째는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상호신뢰와 군축이 실현되고 국제적 지지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넷째는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많은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관계개선과 함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과 협력기반을 확대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가야만 한다.’

59) 양문수,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2001, LG경제연구원, 187쪽



이는 탈냉전시대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냉전대결구도를 화해와 협력의 구도로 국면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 상호 왕래를 자유롭게 하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번영하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상황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교류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온 결과, 최근 들어 다방면에 걸쳐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내적인 징후와 외적인 성과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북한이 변화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로 남북협력사업과 관계개선에 있어 소극적 자세를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북한 자신도 더 이상 긴장과 무력으로는 체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교류협력만이 국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2)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

수산부문에 있어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본방향은 첫째, 남북한 수산분야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되 국내 생산어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후에 협력사업을 확대하여야 하고, 셋째, 수산업의 특성상 정부차원에서 남북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선원안전보장 등을 설정하여 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간부문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 2월 16일에 이루어진 ‘남북경협에 관한 기본합의’를 토대로, 민간협력의 활성화 유도하기 위해서 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시행될 때 수산분야의 협력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어업공동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가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다. 또한 수산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국내 어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수반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남북어업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업을 검토해 보면, i)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활성화, ii) 반입수산물의 상품성제고를 위한 수산물 가공공장의 건설 및 운영, iii) 양식어장과 연어부화장 조성·운영 및 기술협력, iv) 북한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을 위한 남북한 어업자원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내 수산물의 수급상황을 볼 때 어장축소에 따른 국내 생산의 감소와 수입자유화 그리고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의 확대에 따라 수입수산물이 총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은 부족한 수산물 공급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반입되는 수산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남북간 교역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산물 가공공장의 건설 등 민간부문의 투자사업은 북한의 수산협동공장 등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량하여 수산물가공산업의 기초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공원료확보를 위한 냉동·냉장시설 등에 투자될 필요가 있다. 북한 실정을 고려 전력 등 수산물가공을 위한 기반시설이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화된 가공공장의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진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북한의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양식어장 및 연어부화장 조성사업은 단계적인 시설투자로 협력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연차적으로 시범양식장(내수면, 동해, 서해) 조성 및 연어부화장 시설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상호보완적인 생산기술 협력체제 구축하고, 앞으로 명태·오징어와 함께 연어자원의 공동조성을 통하여 동해안 지역의 중점 수산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의한 사업이다. 동해에서 남북어업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동·서해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남북한 어업인들이 공동조업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는 우리 어선의 단순입어형태의 협력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출어하는 어장의 경제성에 대한 조사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한 어업자원 공동조사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남북한 수산부문의 상호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수산통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인접수역과 조업지역에 대해 공동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분야별 공동세미나 개최, 자원 상태 및 어업실태 조사 등을 위한 인적교류 확대가 요구된다.

### 3. 북한산 수산물 반입사업의 발전방안

수산물교역은 일정량의 집하가 필요하고 집하지역내에 보관할 수 있는 물적인 수단과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산물 반입량이 증대되면 될수록 가공유통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은 시급성을 갖는다. 수산물 양육시설과 가공 및 포장기술 등이 부족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선도유지를 위해 선상처리용 얼음도 부족하고, 냉동·냉장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기술도 열악한 상황이며, 선별·규격화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나마 잡고 있는 어획물들이 국제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딱한 사정에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산물 반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물의 상품특성상 현물평가가 불가피하며 출하시기가 불규칙적이므로 구매자가 현지에 상주함이 불가피하다. 남북한의 인적교류의 제한으로 제3자 중개에 의한 교역은 경제적 이익의 감소뿐만 아니라 교역확대와 발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공산품의 품질수준은 제조공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조후 품질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의 품질은 어획시기와 장소 그리고 선도유지를 위한 어획후 관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남북한간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게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교역되는 수산물 품질에 대한 인식 격차는 생산자의 기대가격과 거래되는 실재가격간의 격차를 야기하고 이를 출하자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상호간에 신뢰감이 떨어지게 된다. 수산물의 경우 품질에 따른 가격마찰이 교역당사자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찰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출하되는 현지에서 품질확인이나 경쟁매매방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북한산반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유통비용과 제반경비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입확대를 위한 채산성과 관련하여 유통경비를 절감시키는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반입의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으로는 명태, 복어, 가자미, 홍어 등의 어류와 가리비, 바지락, 소라, 피조개 등의 패류가 있고, 기타 수산물로는 문어, 털게, 대게, 다시마 등을 들 수 있다.

명태의 경우 현재까지 냉동품 형태의 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국내 원양산 명태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못하다. 북한의 명태 어획도 자원감소로 침체되어 있으며, 또한 생산량 변동이 크므로 안정적인 대량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냉장품 형태의 반입은 국내 연근해산 명태 어획의 부진에 따라 확대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냉장명태의 반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도유지 및 규격화 등의 품질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복어는 종래 냉동품 위주의 반입이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냉장품 형태가 증대되고 있다. 북한산 반입 복어는 고급어종이므로 국내수요와 적절한 조정을 한다면 냉장품 형태의 반입에 의해 커다란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일본시장으로의 재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자미의 예를 보면 1995년도 이후 국내 어획이 매우 부진한 어종으로, 1997년 이후 북한산 반입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산 반입가격이 국내 산지시장 가격에 비해 50% 미만에 불과하며, 북한 내에서의 어획이 소규모 연안어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원수준도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추측된다.

홍어는 국내에서 기호품으로 이용되는 고가격 어류로서 최근 어획이 극히 부진하다. 반면에 홍어에 대한 북한측의 수요는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자원수준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원양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냉장품 형태로 반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리비는 1990년대 동해안에서 양식이 본격화된 이후 수요가 증대되었으나 양식생산의 불안정에 따라 수급불균형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어종이다.



북한에서도 최근 양식이 시작되고 있으며, 자연산 자원의 양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지락은 북한 서해안의 간석지에서 생산되는데, 자원수준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반입을 위한 북한내에서의 집하가 용이한 어종이다.

소라는 국내에서 과다어획에 따른 자원감소에 기인하여 공급부족 및 고가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는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통체계의 미비에 따라 생산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어는 북한산 수산물 반입초기부터 대표적인 반입어종이었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냉동품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냉장 및 활어 형태의 반입도 시도되고 있다.

게는 반입통계상에는 구체적인 품목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조사에 따르면 그 대부분이 털게와 대게로 파악된다. 게는 문어와 마찬가지로 종래 대표적인 반입어종이었으며, 최근에는 기존 냉동품 위주의 반입형태로부터 냉장 게 및 활게 형태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4. 민간부문 투자협력사업의 발전방안

1998년부터 이루어진 대북 민간부문 투자사업으로 미홍식품과 태영수산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사업성과는 1999년이후 담보상태에 머물러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볼 수 없다. 두 기업만을 기준으로 북한의 투자협력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유치하였던 다양한 투자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민간기업의 투자협력사업 발전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북한은 1984년부터 합영법<sup>60)</sup>을 제정하여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60) 그러나 1984년 당시의 합영법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 시행세칙 등에 대해서는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다. 합영회사 소득세법, 외국인 소득세법, 합영법시행세칙 등은 1985년 이후에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대외신용관계에 불신이 제기되는 문제점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서방측 국가들의 자본투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조총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130여개의 대북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패하였다.<sup>61)</sup>

북한에 투자된 대표적인 합영공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운산광산개발이사회’의 예를 들 수 있다. 재일 조총련계 상공인 50명이 1985년 9월에 자본금 1억 2,0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운산광산개발’은 동년 11월 북한과 함께 합영회사 ‘운산광산 개발 이사회’를 설립하였다.<sup>62)</sup> 북한 유수의 금광인 운산광산은 금광량(金鑛量)이 약 1,000t, 약 2조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과 조총련은 이 금광개발사업에 매우 기대를 갖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금광개발 합영사업은 곧 어려운 상태에 빠졌으므로 본 사업은 실패한 예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화학합영회사 함흥공장’이 있다. 1988년 ‘국제트레이딩’사는 북한의 ‘용악산 무역회사’와 출자금 2,000만 달러(출자비율 일본 50.4%, 북한 49.6%)로 ‘레아·아스’ 고온초전도용 재료를 생산하는 국제합영공장을 함흥에 세울 것을 계약하였다. 이 레아·아스<sup>63)</sup>를 생산하는 ‘국제화학합영회사 함흥공장’의 설립은 1989년 7월에 착수되어 1991년 4월에 완공되었는데, 그 규모는 조·조 합영회사 가운데 최대였다. 이처럼 상당한 기대를 받으면서 출범한 이 회사는 초기에는 상당히 성공적인 합영회사의 사례로 평가되었으나, 1997년경부터 조업중단 또는 가동중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셋째로 ‘평양 피아노 합영공장’이 있다. 평양 피아노 합영공장은 조총련계 조선대학 출신의 동창생 4명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PACO’와 북한

61) 배정호,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2000, 통일연구원

‘1998년말 131개 대북투자 합영회사 중에서 정상적으로 조업중인 합영회사는 ‘조선합영은행’, ‘모란봉합영회사’, ‘김만유 병원’ 등 15개 정도에 불과하다.’

62) 북한으로서는 채굴된 금을 매각하여 대일채무를 상환할 수 있고, 조총련계 기업으로서는 무역대금의 미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조총련은 이 ‘금광개발 합영사업’을 매우 중시하여 의욕적으로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추진하였다.

63) 레아·아스는 하이테크 산업의 필수품이고,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므로 일본으로서는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필요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전망이 상당히 밝은 조·조 합영사업분야였다.



의 ‘조선악기총회사’가 1987년에 합영계약을 체결하여 설립한 고급 피아노 생산공장이다. 이 공장은 1989년 11월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sup>64)</sup> 평양 피아노 합영공장은 비교적 성공한 합영회사로서 평가되었지만, 일본국내시장에서 전자올겐이 보급되면서 더 이상 신장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넷째로 ‘모란봉 합영회사’가 있다. 사쿠라 그룹이 1987년 북한과 합영계약을 하여 평양에 설립한 모란봉 합영회사는 남성용 신사복을 생산하다가 최근에는 잠바도 생산하고 있다. 모란봉 합영회사는 가장 성공한 조·조 합영회사로 평가를 받아왔다.<sup>65)</sup> 그러나 최근 경영권 및 인사권을 북한측이 장악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사업은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외국기업과 합영사업의 사례도 있다. 비교적 성공한 외국기업과의 합영사업 사례는 북한과 싱가포르 기업간에 합영하여 설립한 나진·선봉지구의 ‘수산물 가공 합영 공장’이 있다.

또한, 일본의 기업과 합영하여 설립한 ‘남포 전자부품 합영공장’이 있다. 남포 전자부품 합영공장은 일본제 에어컨에 소요되는 특수코일의 약 40%를 제작·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성공적인 사례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합영·합작 사업들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합영·합작 사업들이 실패 또는 부진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우선, 북한측의 원자재 공급이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64) 이 공장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화학 합영회사 함흥공장」 함께 조·조 합영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피아노를 생산하는데 거의 일본기술과 일본산 부품(부품의 약 70%가 일본산)을 사용하였지만, 피아노 음의 가장 중요한 향판(響板)은 백두산의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평양 피아노 합영공장」에서 제조된 피아노는 1992년 4월부터 PACO라는 상표를 달고 일본에 수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시장의 최종판매가격은 일본산 피아노보다 10~20%정도 저렴한 편이지만, 품질은 결코 일본산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5) 「모란봉 합영회사」에서 생산된 남성복은 사쿠라그룹을 통하여 일본국내에 판매되었는데, 1992년 가을부터 「大丸 백화점」의 직영 5개의 점포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었다. 일본내 평가는 최종시장가격이 통상 백화점 가격의 50%정도인데 비하여, 품질이 봉제기술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편이었다. 즉 일본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판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않았다. 잠사회사의 경우 국제시장의 잠사가격이 상승하자 원자재를 수출용으로 우선 할당하고 잠사공급을 중단한 예도 있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이 미비된 상태에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전력공급이 불안정하여 조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모란봉합영회사나 평양피아노합영회사의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였다.

셋째, 합영회사 종사자는 책정된 임금 중에서 일부만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노동의욕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윤이 쪼이 되는 수준까지 노동력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넷째, 북한측은 합영회사 외국파트너들의 기술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감을 갖고 사용하기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즉 신기술의 채택과 경영혁신 등의 중요성을 도외시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관료의 부패, 계약이행 경시, 행정서비스 취약 등 북한사회의 비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북 합작투자사업에서 고려하여야 할 유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열악한 행정서비스를 고려할 때 지방차원의 합영회사와 합영을 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은 중앙정부 권력차원의 공적 창구를 통한 제도적 보호막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측은 자본주의적인 경영이 미숙한 상태이므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영권과 인사권은 남측의 투자자가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경영진과 핵심기술자들은 현지에 상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하고 원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가능한 한 사업의 초기에는 임가공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전력과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한 현지 사정을 고려할 경우 자가발전으로 전력공급이 충족될 수 있는 분야가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영에 관한 계약은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와 합영에 관한 법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수산분야에 처하고 있는 유통시설의 낙후성을 감안할 때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은 패키지화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산물 가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품성의 유지·보전을 통한 유통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재반입하거나 수출하는 임가공형태의 진출은 북한측의 투자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다품종·소량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은 집하과정에서의 선도유지를 위한 저차가공이나 냉동·냉장 및 포장 등이 수산물가공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한 수산물의 규격화와 품질의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산 수산물 반입확대와 연계되어 투자사업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거점생산지에 소규모 가공공장을 세우고, 선적항 인근에 집하센터를 배치하는 등 수집기능의 체계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활어와 활패류의 반입은 집하를 위한 유통시설 투자가 요구된다. 대상어종은 어류로서는 넙치·도다리, 패류로서는 백합·가리비·전복·소라·피조개 등이 육상 및 해상 축양시설을 통한 유통업 진출의 주요대상이 된다. 활게나 활바지락 등은 효율적인 집하체계를 구축하는 문제가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냉동 및 냉장품에 대해서는 북한측 기관과 협력하여 남한측 반입업체들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반입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안정시킴과 동시에, 북한측 출하자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가격실현과 어획물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5. 남북한 공동어로사업의 발전방안

북한은 우리측에 북한 동해북부어장의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공식 제의하였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내 금강산지구에서 개최 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는 북한당국이 ‘남북당국가간 어업협력 회담’을 제의하였고 북측은 남측에 동해어장의 일부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협의가 계속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대표 기조연설(2000. 12. 26)과 수산성 담화(2001. 1. 13)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2002년 10월 19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측 어민들의 북측어장 일부 이용 문제와 관련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하여 남북간 수산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우리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전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제의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은 북한이 제공하려는 동해 북부어장에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함으로써 상호간 이해증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동 사업을 계기로 남북간 수산협력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적인 검토사항들에 대한 실무적인 구체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 수산당국가간 회담이 개최될 때, 동 어장에 대한 수산자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시험조업을 실시한 이후, 본격적인 조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어업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 사업은 통일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적인 과시적 수산협력사업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된 남북어업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업수역에 대한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조업이 용이해야만 한다. 북한이 제의한 어장에서의 지속적인 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어업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은 조업수역의 상업적 가치인 것이다. 즉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측이 제의한 어장의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이 없을 경우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을 요구하여 어업협력사업을 추진해 가야만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어장위치의 결정에 따라 조업의 용이성이 결정되는 만큼 조업의 경제성 못지



않게 조업활동의 용이성도 중요하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 선박안전관리 및 해상기상여건, 어획물 양륙항 및 항행거리 등이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업선원의 신변보장 및 조업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조업수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어로활동 보장과 조업선원의 신변 및 선박의 안전보장은 필수적인 것이다.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조업선에 적용되는 법규는 국제해양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남한의 어선이나 어선원들이 조업수역 이탈, 남북간 합의사항의 불이행, 여타규정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의 해결방안 등도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업협력 기본합의서에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부속서 또는 별도합의서에 명문화가 필요하며, 남북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례별로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 신변안전 보장문제는 다른 어떤 의제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충분하면 어업협력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게 될 것이다. 조업해역에서의 해난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대책 등도 사전에 강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긴급해난시에 대비하여 해난선박의 위치에서 최단 시간내에 접근하여 구조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악천후 및 각종 재난시 대피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조업어선의 안전과 원활한 조업활동을 위해 어선통과지점 설정 및 어선통제방안, 어선표기 및 어선킵별방법, 어선과 육지간의 통신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 1) 남북어업협력회담 추진

남북어업협력합의서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남북어업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서는 협력사업의 근간이 된다. 합의서에 북한이 제의한 북측동해어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어업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는 세부 이행사항을 규정하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남북어



업공동위원회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남북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는 어업인들의 어로활동 보장, 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쌍방간의 수산분야 협력사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남북어업공동위원회는 정부 당국자, 어업인 대표를 포함하여 5~6명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회 활동 및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남북어업공동위원회규칙(가칭)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조업수역에 대한 어업자원조사 및 시험조업 실시

북측이 제의한 어장이나 우리측이 요구하는 어장의 어업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어업협력사업은 곤란하므로 사전에 어업자원 조사의 실시가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를 주축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상호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어업자원 등에 대한 상호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업적인 조업의 선행단계로 시험조업을 실시하여 조업수역에 대한 경제성 및 조업여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시범조업은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하고 사업참여업종 및 입어척수는 조업수역이 동해인 점을 감안 강원·경북지역 해당업종 어선 중에서 일정척수를 선발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 3) 본격적인 조업 실시 및 협력사업 확대방안 강구

남북한 당국간 협상을 통하여 조업수역, 입어조건 등을 합의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어업협력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사업의 주체는 수협중앙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입어대상업종 및 선박척수 등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다. 동 어장에서 어업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앞으로 동해는 물론 서해에서의 어업협력사업도 확대하여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어업협력사업이 정착되면 어선·어구의 현대



화, 수산물가공시설 및 기술지원, 수산기술 개발 및 교류 등 수산분야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해와 서해 어장에서 어획되는 경제성을 갖는 대부분의 어종들이 회유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남한측 관련 어업인간의 이해상충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어업인들은 북한의 어업발전과 자원관리가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한반도 어업인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대승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이들 어업인들간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원칙에 따라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제시하는 남북 어업협력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계·업계·어업인단체 모두가 정부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격려하여야 할 것이다.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수산부문에 있어 실행가능한 남북협력사업을 정리해 보면,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북한내 생산 및 유통시설 합작투자, 그리고 북한측어장 입어사업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품목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가격과 남측의 시장가격이 가격차이를 갖고 있고, 남한내 수산물 공급부족이 예상되므로 시장교란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내 생산 및 유통시설의 합작투자 사업들은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사업외비용 지출이 크게 발생한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지 투자사업은 반입되는 북한수산물의 품질 관리와 위생문제 등과 보완성을 갖기 때문에 사업진전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내 어장의 공동 입어사업도 북한 국내와 직접 접촉을 갖지 않는 해양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적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체제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본으로 대외경제협력을 보완적으로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입장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남북한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정리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역할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대북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북한의 수산업관리체제와 어업현황

북한의 수산업관리법규는 i) 어업에관한규정(1949), ii) 양식업에 대한 내각과 중앙상무위원회의 공동결정(1958), iii) 수산기업소규정(1947), iv) 수산제품검사에관한규정(1940)의 4개 기본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1월 최고인민위원회가 수산업 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수산업법을 제정·공포하고, 1997년에는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수산부는 다수의 부령을 제정한 것으로도 알려져 북한의 수산업 관리에 관한 법체계가 최근에 혁신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최고권력자와 노동당의 강령과 교시 등이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초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북한은 수산업을 인민 식량을 보충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된 공급원으로, 또한 북한경제에 있어 중요한 외화획득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재원의 조달, 계획추진의 차질 등으로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관할하는 바다는 동해와 서해로 완전 분리되어 연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장환경과 수산생물의 분포도 상이하다.

동해의 주요어종은 냉수성으로 명태, 청어, 가자미, 은어 등을 들 수 있으며, 온수성으로는 정어리, 멸치, 꽁치, 학꽁치를 대표어종으로 볼 수 있다. 서해는 대구, 갈치, 삼치, 전어, 도미류, 가자미, 홍어뿐만 아니라, 김, 미역 등 해조류도 풍부하며, 바지락, 굴, 새조개 등 패류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1960년대 수준을 밑도는 63만톤에 머물러 남쪽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북한의 어선관리는 일반 동력어선들은 국가해사국 해사감독처에서, 무동력어선은 안전국 국토처에서 등록과 감독관리를 맡고 있다. 어선의 입출항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모든 어선들은 어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무동력선도 철저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어선은 크게 무동력 어선과 동력어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안어



장에 이용되는 무동력선은 대부분 목선으로 쪽배, 전마선, 범선으로 구분된다. 동력어선은 1,500여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력어선은 450톤내외 수준으로 500여척이 있다고 하며, 트롤, 선망 등의 복합선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30톤 수준의 소형 트롤어선과 통발 어선들이 900여척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어구는 80% 이상이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어망은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어구어법은 명태트롤일 것이며, 연안어류는 정치망형태의 덩장어법으로 잡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마선 또는 범선을 사용하여 인력으로 양망이 가능하므로 연료부족이 심각한 북한에서 연안어업의 상당 부분이 덩장어법에 의존할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양식업을 어로어업 및 가공업과 함께 3대 부문으로 인식하여 정책적으로 중점 지원을 하여 왔다. 여건을 볼 때 사료를 공급하지 않고 자연생산력을 이용하는 해조류와 패류양식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역, 김 등의 해조류와 바지락, 굴 등의 패류가 양식되고 있으며, 어류양식도 내수면의 저수지나 하천수에서 자연생산력을 이용한 잉어, 붕어 양식과 사료를 공급하지 않는 초어, 백련 등의 양식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 전역에서 내수면 양식에 대한 열기는 상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주요 양식품종을 보면, 해조류는 미역, 다시마, 김이 행해져 왔으며, 이 중에서 특히 기술수준이 높고 실제 생산량이 많은 것은 다시마이며, 냉수성 해조류인 미역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류의 경우에는 서해에서는 굴과 바지락 양식이 성행하고 있으나, 조방적인 생산 방식인 투석식 및 살포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2. 북한과 인접국간의 해양경계와 어업관계

남한과 북한간의 어업경계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우선 우리 정부는 북한과 인접한 경계어장에서 어선피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4년 농림부예규 제



32호로 어로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어로한계선은 법적으로 우리 어선의 어업활동에 대한 자위적 통제선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방상 목적과 어선납북방지 및 안전조업을 목적으로 1968년 11월 동해와 서해에서 어로한계선 남쪽수역의 일정 범위에 대해 특정해역을 설정하였다. 특정해역은 우리 정부가 한국어선의 어업활동에 대한 자위적 통제조치를 시행하는 수역이다.

우리 정부는 1975년 중국과의 어업분쟁 및 피납방지를 목적으로 황해 일·중 어업협정선에서 약 35해리 완충수역을 두는 조업자율규제선을 설정하였다. 이후 서해 조업자율규제해역 등으로 변경되었다.

서해 5도란 황해도의 대동만 입구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그리고 해주만 입구의 연평도, 우도를 말한다. 이들 섬들이 북한에 근접하기는 하나 전쟁 전부터 한국관할에 있었고 전쟁 중에도 변경이 없었으며 또한 1953년 휴전협정 제2조제13항(b)에 의하여 법적지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논쟁대상이 되지 않는다.

휴전협정에는 동해와 서해의 양측 관할권을 구획하는 해양경계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유엔군측은 1953년 서해 5도로부터 북한 점령지역과의 대략적인 중간선에 해당되는 북방한계선(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북한에 통고했으나, 당시 북한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그 후 북방한계선은 사실상의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역할을 하여 왔다.

북한과 인접국간의 해양경계와 어업관계를 정리하면, 북한은 구소련과 1985년 ‘영해경계계획에관한협정’을 체결하여 두만강 하구의 경계획정을 한 바 있다. 1986년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0년에는 1985년 ‘영해경계계획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계를 공식화하였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북한이 1977년 동해와 황해에 배타적경제수역과 50해리 군사경계수역을 선포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일본은 당시까지 조업하여 온 기존어장의 확보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 협상의 결과 1977년 북한 조선동해수산협동연맹과 일본 일조어업협의회간 민간차원의 ‘일·조 어업협력에 관한 잠정합의서’를 체결되었다. 제1차에서 제5차에 이르기까지



잠정합의가 1989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1989년 제6차 잠정합의는 북한의 조·일 우호친선협회와 일본의 일·조 우호의원연맹사이에 체결되었으며 1990년부터 2년간 유효한 ‘북조선 200해리 경제수역에 대한 양국간 어업잠정합의서’를 서명하였고, 1991년 제7차 잠정합의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으나 1994년 1월 이후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었으므로 현재까지 양국간 어업협력관계가 중단된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간의 어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황해에서 북한은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중간선으로 추정되는 ‘바다 반분선으로 경계를 정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밝힌 바는 없으며, 수역 전체를 군사수역으로 선포하고 있다.

### 3. 남북수산업협력사업의 추진과 문제점

2000년도 총 공급량 455만 톤 중 수입수산물이 약 31%를 차지하였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보면 1995년에 46kg까지 증가했으나 IMF 경제위기하에서 1998년에는 35kg으로 감소하였으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수출입의 추이를 보면, 수출은 1990년대에 들어 정체하고 있는 반면 수입이 급증해 2000년에는 수출이 1411백만 달러, 수입이 1410백만 달러로 균형을 보이다가 2001년부터는 수입이 초과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국가별 수입실적을 보면, 2000년 현재 중국이 487백만 달러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183백만 달러로 13%, 미국이 145백만 달러로 10.3%, 러시아가 125백만 달러로 8.8%이며, 상위 4개국이 수산물수입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산 수산물의 연도별 반입실적을 보면, 반입이 시작된 1989년에는 17만 달러 수준으로 극히 적었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6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는 4,000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은 1996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24,633톤에 4,200만불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반입액 1억5천2백만달러의 27%를 점유하는 수준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이 일본에 이어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서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수산물을 북한에 반출하기도 했는데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의 현지투자사업의 사례를 보면 미홍식품과 태영수산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미홍식품은 중국 ‘미영기업유한공사’와 공동으로 북한 ‘조선철산주식회사’와 사업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어패류채취 및 수산물 가공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8년 3월 13일 통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취득하였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측의 파트너 교체로 인해 담보상태로서 별다른 사업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태영수산은 참가리비 양식분야의 전문기업으로, 1996년부터 남한측 대기업인 LG상사와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대북가리비양식사업 관련합의서를 교환하고 LG상사가 자본을 투자하고, 태영수산은 양식기술을 제공토록 하였다.

1997년 10월 14일 통일원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취득하고, 1998년 9월에 「라진수산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사업이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민간기업의 남북공동어로사업 추진한 사례로는 (주)해주와 안승유통이 있다. (주)해주의 합작입어사업을 보면, 1998년 10월 남북 양측이 공동 투자하는 ‘풍어수산합작회사’를 평양에 설립하고, 11월 통일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1999년 2월에 사업자승인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북한내 조업구역이 서해안 군사분계선 이북의 연안이었으며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어 남측 어업인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부는 2000년 8월 16일로 사업승인을 불허하였다. 2000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다음으로 안승유통의 북한 동해수역에서 붉은대게를 조업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산 붉은대게가 수출용이기는 하나, 저가 및 무관세로 대량 국내에 반입될 경우 어가하락으로 인해 강원·경북 계통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통일부에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어업인단체의 남북공동어로사업 추진사례를 보면 전국어민총연합회의 북한 수역 입어 추진사업과 수협중앙회의 합작입어추진 사업이 있다. 전국어민총연합회는 정부의 접촉승인 유보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추진하였다. 통일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서가 반려되었다.

수협중앙회의 합작입어사업의 경우에도 1998.5.~2000.4.까지 5차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 양측이 협의하였으나, 북측에서 선박 4~5척 및 운영기금의 우선 제공 요구와 사업보장 불투명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

북측이 제안한 동해북부어장에서의 공동어로사업이 있다.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측은 동해북부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공식 제의하였으며, 이에 남측은 북측제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측 동해어장의 정확한 위치와 조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동 어장의 경제성과 국내어업인의 조업용이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어장의 경제성과 조업의 용이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

#### 4.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의 발전방안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내적 한계와 자립경제노선의 추구에 따라 야기된 것으로,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사회주의권 붕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인하여 야기된 것이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간 계속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995년 이후 계속된 자연재해는 북한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김정일의 위기해소 방안은 군대강화 → 사상강화 → 경제강화의 접근방식을 모색하는 독특한 경로를 겪었다. 이에 따라 대외교역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 관계를 보완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이는 자립 경제에 바탕을 둔 제한적 개방 경제의 추구이다.

2000년 6월 13~15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전기를



마련하여 남북장관급, 국방장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한이 ‘남북당국자간 어업 협력 회담’ 을 제의하고, 남측에 동해어장의 일부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2002년 10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측 어민들의 북측어장 일부 이용 과 관련된 실무접촉을 개최’ 할 것에 합의하였다.

김정일체제는 내부결속을 강화하면서 기본이념과 체제는 변화되고 있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대남 정책에 있어 서서히 변화를 보이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수산분야에 있어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을 보면, 첫째, 남북한 수산분야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되 국내 생산어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후에 협력사업을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수산업의 특성상 정부차원에서 남북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함으로써 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2000년 2월 16일에 이루어진 ‘남북경협에 관한 기본합의’ 를 토대로, 민간협력의 활성화 유도하기 위해서 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시행될 때 수산분야의 협력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어업공동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가 협의체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국내 수산물 수급상황을 보면, 어장축소에 따른 국내 생산의 감소와 수입자유화 그리고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수입이 총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은 부족한 수산물 공급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반입되는 수산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앞으로 북한산 반입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 반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물의 상품특성상 현물평가가 불가피하다. 수산물의 품질은 어획시기와 장소 그리고 선도유지를 위한 어획후 관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남북한간에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격차가 크게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수산물의 경우 품질에 따른 가격마찰이 교역당사자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찰의 해



소 또는 완화를 위해 출하되는 현지에서 품질확인이나 경쟁매매방식이 요구된다. 교역으로부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중개에 의한 상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없다.

북한산반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유통비용과 제반경비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입확대를 위한 채산성과 관련하여 유통경비를 절감시키는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1998년부터 이루어진 대북 민간부문 투자사업은 미홍식품과 태영수산이 대표적인 협력사업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사업성과는 1999년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러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두 기업만을 기준으로 투자 협력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조총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130여개의 대북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기업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실패하였다. 이들 합영·합작 사업들의 실패 또는 부진의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북한측의 원자재 공급이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이 미비된 상태에서 물류비용의 과다하게 소요되며, 특히 전력공급이 불안정하여 조업중단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셋째 합영회사 종사자는 책정된 임금 중에서 일부만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노동의욕을 상실하였다. 또한 이윤이 영이 되는 수준까지 노동력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넷째, 북한측은 합영회사의 외국파트너들의 기술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감을 갖고 있음. 즉 신기술의 채택과 경영혁신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논의된 경제적인 요인이외에 관료의 부패, 계약이행 경시, 행정서비스 취약 등 북한사회의 비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다.

공동어로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조건은 조업수역에 대한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조업이 용이해야 한다. 어장에서 지속적 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한 우선 조건은 조업수역의 상업적 가치이다. 이외에도 남북관계의 특수성, 선박안전관리, 해상기상여건, 어획물 양륙항 및 항행거리 등이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다음으로 조업선원의 신변보장과 조업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업협력 기본합의서에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부속서 또는 별도합의서에 명문화가 필요하며, 남북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례별로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어업협력합의서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타사항은 남북어업공동위원회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남북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는 어로활동 보장, 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 등 협력사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북측이 제의한 어장이나 우리측이 요구하는 어장의 어업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어업협력사업은 곤란하므로 사전에 어업자원조사의 실시가 필요하다. 남북한당국간 협상을 통하여 조업수역, 입어조건 등을 합의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어업협력사업실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입어대상 업종 및 선박척수 등은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다. 앞으로 어선·어구의 현대화, 수산물가공시설 및 기술지원, 수산기술 개발 및 교류 등 수산분야 등으로 협력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5. 남북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북한을 생각할 때면, 공식적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대표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폭언을 해대는 얼굴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김정일의 언행이 상종가 인기몰이를 하였던 측면이 겹쳐서 나타난다. 최근 북한당국은 핵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초강대국을 상대로 벼랑끝까지 치닫는 모험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 공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이율배반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고 있으면 물가에 서 혼자 놓고 있는 외아들을 보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실무자들은 무엇인가 북한체제와 관계자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고 한다. 무엇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변화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인식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개방과 개혁을 달성하는 과정을 보면, 1978년에 집단적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사유재산적 책임생산제를 도입한 이후 7년이 경과된 1984년에 와서 식량자급이 가능해 지고 상품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비로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에서 상거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그 이후 4~5년이 경과된 이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까지도 국유형태의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산력이 다소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크게 증대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sup>66)</sup>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인제도를 출발시키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본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투자를 위해서 원산을 방문한 남한 기업가에게 냉동생선을 고급요리라고 대접하였다는 말을 듣고 의심을 해 본 적이 있다. 이는 냉장고를 갖고 있으며 전기사용에 애로가 없다는 측면에서 냉동물은 일반적 소비상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류층을 의미하게 되는 해프닝이 일어나는 사회가 북한이다. 따라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어서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좀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상식적인 범주에서 보면 북한은 합리적이고 개방적이지 않다. 이는 북한체제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는 그들 나름대로 모종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기준에 따라 해석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

남북관계는 변화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바다를 통해 가는 것과 육로를 통해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는 반세기 철책선이 무너지는 것이요 냉전이테올로기의 종언과 함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물며 북한수역에서 남북한공동조업이 이루어져 후손에게 물려줄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협력이 성사된다면, 이는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협력사업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인식차이를 명확하게 구명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북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66) 김운근, “남북 농업교류와 협력의 현재와 미래 -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사)통일농업포럼심포지움 자료, 2001. 3. 28, 7쪽



제약과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최소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남북협력사업의 특성이다.

따라서 남북협력사업에서는 정치적 속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일회성 사업이 정치적으로 집행되기도 했다. 이는 남북협력사업을 후퇴시킬 뿐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사업을 명분으로 많은 남쪽 인사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북한측 파트너는 남쪽의 속성을 소상히 알고 있다. 이들을 만나는 북한측 담당자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남한 인사들을 접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여부와 한계를 잘 알고 있다. 북한도 원치 않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최근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북한측의 교섭창구가 정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속성을 갖는 사업이 경제적 판단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도 개방과 개혁만이 생존을 위한 길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더라도 체제위협의 요인이 커지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완급을 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그재그식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다방면에 걸쳐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내적인 징후와 외적인 성과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므로 남북협력사업과 관계개선에 있어 소극적 자세를 갖고 있다. 북한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여, 집단적 소유와 중앙집권적 통제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본질은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정책과 경제관리에 있어서 방향전환을 조심스럽게 생존을 위하여 모색하고 있다.

2002년 7월부터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적 요소가 가미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초기 개혁정책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다.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에 수반되는 비용부담과 장애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국민과 어업인을 설득시키는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무현,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강원비전 포럼」, 강원도, 2001. 4.
- 고영환,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소고’, 북한조사연구 제1권제1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 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1973. 12. 1.
- 김동진 외, 「조선수산사 Ⅲ」,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991.
- 김민중, 「남북한 수산업의 발전방향」,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과정, 1996.
- 김운근 외, 「북한의 임업과 수산업 개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김운근, 「남북 농업교류와 협력의 현재와 미래 -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사)통일농업포럼심포지움 자료, 2001. 3. 28.
-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3권, p.79~80.
- , 「김일성 동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p.181.
-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1996. 12. 7.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 , “당과 혁명 대오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1986. 1),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 노동신문, “우리 당의 선군 정치는 필승 불패이다”, 1999. 6. 16.
- 노동신문, 1999. 9. 9.
- ,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1998. 9. 17.
-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현 시기 경제운영 방향과



- 자립적 민족경제 잠재력의 옳은 리용”, 「경제연구」, 1997년 제4호.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식 경제를 변함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보루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1998년 제2호.
- 리민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쌓아 올리신 자립 경제 건설의 역사적 공적과 그 영원한 생명력”, 「경제연구」, 1997년 제2호.
- 리종산, “총대 중시는 우리 혁명의 기본 전략 노선”, 「근로자」, 2000년 제3호.
- 리창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건설 사상을 완벽하게 밝혀주신 위대한 사상 리론가이시다”, 「경제연구」, 1998년 제4호.
- 박성쾌 외, 「북한수산물 반입 및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 박형중, 「19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통일연구원, 1998.
- 배정호,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통일연구원, 2000.
- 북한 동해수산연구소, 「수산과학기술논문집」, 1986.
- 서진영 외, 「효율적인 대북투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7.
- 양문수,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LG경제연구원, 2001.
- 오승렬,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 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명호, “경제관리와 경제제도의 연관을 부인하는 기회주의적 견해의 반동성”, 「경제연구」, 1998년 제1호.
- 이병기, 「남북한 공동어로수역의 설정과 그것의 운용방안」, 국토통일원 학술보고서, 1990.
- 이완범,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기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6.
- 이종석, 「북·중 관계의 현황과 추이」, 세종연구소, 2002.
- 이종석 외,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세종연구소, 2000.
-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인제대.



- \_\_\_\_\_,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8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1996.
- 임강택, 「북한의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의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1998.
- 신영태, “남북한 어업협력 방안”, 「통일경제」, 제47호, 현대경제연구원, 1998.
- \_\_\_\_\_, “북한수산업의 구조와 실태”, 「통일경제」, 제48호, 현대경제연구원.
- 장명호, “농업생산은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 「경제연구」, 1999년 제1호.
- 전인영, “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및 개방의 문제 : 사례분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 정형찬 외, “남북한 공동어업정책의 과제”, 「수산경영론집」, vol.24 no.1, 1993.
- 제성호, 「대북투자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1993.
- \_\_\_\_\_,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통일연구원, 1998.
- 조강일, “무역제일주의 방침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 방침”, 「경제연구」, 1994년 제2호.
-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통일연구원, 1998.
- 조선지리지전서.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 2001년 4월 5일, “실리가 나지 않는 공정들을 대담하게 털어 버리고 투자의 효과성을 늘려야 한다.”
- 최영옥,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1997년 제2호.
- 최정운, “수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공통과제”, 「남북한 수산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자료」, 부경대학교, 2000. 7.
- 최정운, 박성쾌 외, 「21세기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남북수산협력 방안」, 해양수산부 2000.
- 통계청, 「해방 전후 남북경제사회상 비교」, 1995.
- 통일부, '남북교역실무', 2000.
- \_\_\_\_\_, ‘남북장관급회담 실천과제’ , 2001. 9.



- \_\_\_\_\_, “통일과정에서 본 우리의 대북 정책” , 2001. 10.
- \_\_\_\_\_,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 2001. 12.
- \_\_\_\_\_,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 2002. 5.
- \_\_\_\_\_,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 2002. 10.
- \_\_\_\_\_, ‘통일백서’ . 2000, 2001.
- 통일연구원,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1997.
- 홍승은, 「자립경제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백산서당, 1990
- 황의각, 「북한경제론 : 남북한 경제의 현황과 비교」, 1992. 4.
- 황장엽, “황장엽의 비밀편지” , 「월간조선특별부록」, 1997. 3.
- \_\_\_\_\_, 「북한의 진실과 허위」, 통일정책연구소, 1998.
- FAO, The Information on Fisheries North BKorea Attachment, 1998.



## 부 록 표

I. 북한의 협력 관련 주요 법규 .....	100
1. 외국인 투자법 .....	100
2. 합영법 .....	103
3. 합작법 .....	108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111
II. 남한의 협력 관련 주요 법규 .....	122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122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129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4
4.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146
5. 남북협력기금법 .....	155
6.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159
7.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	165
8.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167
9.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 .....	170



## I. 북한의 협력 관련 주요 법규

### 1. 외국인투자법

1999. 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 1 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

외국투자자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령역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기업이란 공화국령역 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자는 공화국령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 5 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해외조선동포들도 해당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제 6 조 외국투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제 8 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 9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10조 국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 외국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4조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과 외국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낼 수 있다.

제17조 외국투자자와 해당 외국투자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자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투자자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자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하며 제 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 2. 합 영 법

1999.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 제1장 합영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을 합영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창설할 수 있다.
- 제3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 제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 제5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 제6조 합영기업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 제7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 제8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 제 2 장 합병기업의 창설

제 9 조 합병을 하려는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합병계약을 맺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병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합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 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합병기업의 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병기업 창설일이 된다. 합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합병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병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리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합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합병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3조 합병기업은 내각의 승인밑에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같은 것을 내올 수 있으며 다른 나라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 있다.

제14조 합병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70%이상 5되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늘이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 제 3 장 합병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 합병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병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17조 리사회는 합병기업의 규약을 수정 보충하거나 합병기업의 발전대책, 정



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18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 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영기업은 규약,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는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2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 안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년간 물자구입 및 제품 판매계획을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 물자에 대하여는 반출입 승인만을 받는다.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며 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9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0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 제 4 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년간 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 데만 쓸 수 있다.

제36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37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해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제39조 합영기업은 당해년도의 결산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하여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40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 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 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4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제 5 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 해산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리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 안에 기업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5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관의 계산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46조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상급기관에 신소를 할 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 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 3. 합 작 법

1999. 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 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자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5 조 합작투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

제 6 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작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작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한다.

제 7 조 경제합작을 하려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외국투자자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첨부한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 합작기업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 (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기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창설일로 된다. 합작기업은 기업등록을 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합작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는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다. 합작기업이 승인된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합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몹을 합작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1조 합작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합작기업은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황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황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

제15조 외국투자자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 기타 소득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9조 합작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제20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 전에 해산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 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 제 1 장 정치

- 제 1 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 제 2 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
- 제 3 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 제 4 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 5 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신변을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다.
- 제 6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 제 7 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유지,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8 조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신의주특별행정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 제 9 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식문건을 조선말로 작성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한 공식문건에는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 제1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제11조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 제2장 경제

제1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소유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토지와 자연부원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제1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 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총계획에 따라 한다.

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는 토지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 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제1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이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하도록 한다.

제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 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1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제1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기준을 구행정부와 공화국 해당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2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같은 노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 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 제2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세금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 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2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회계제도를 바로 세우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2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예산과 관련한 입법회의 결정은 최고 입법기관에 등록한다.
- 제2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를 자체로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 제2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환경보호에 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 제3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창설 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 제3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금, 정보, 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

### 제3장 문 화

- 제3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 제3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사회과학과목 교육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제3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학령전(취학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도록 한다.

제3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위한 주민들이 문학예술 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지해를 주는 문학예술활동은 할 수 없다.

제3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을 구예산으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다.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3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전염병의 만연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방조(도움) 받을 수 있다.

제3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대중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신문, 잡지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 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기간행물, 체신, 방송망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주도록 한다.

#### 제 4 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4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으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2. 공화국공민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3.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이상 거주한 자



#### 4. 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제43조 주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

제44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7살 이상의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45조 주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해당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6조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수 없다.

제47조 주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48조 주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민의 신소와 청원을 공정하게 심의, 처리한다.

제49조 주민은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50조 주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희망과 재능에 따라 주민은 직업을 선택할수 있으며 노동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다.

제51조 주민은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은 공화국이 정한 공휴일, 명절일의 휴식을 보장받으며 다른 나라 사람은 민족적풍습에 따르는 휴식을 보장 받을수 있다.

제52조 주민은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한 물질적방조를 받는다.

제53조 주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4조 주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



제55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산전산후휴가제 같은 시책으로 애기어머니와 어린이를 보호한다.

제56조 주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결혼과 가정을 보호한다.

제5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 구예산으로 실시하는 사회적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국민은 조국보위의무를 지닌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군대초모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59조 법규는 주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구관리의 기본수단이다. 주민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제정한 법규를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 5 장 기 구

### 제 1 절 입법회의

제60조 입법회의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다. 입법권은 입법회의가 행사한다.

제61조 입법회의 의원수는 15명으로 한다. 입법회의 의원은 주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62조 입법회의 의원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국민이 될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으로 될수있다.

제63조 매기 입법회의 임기는 5년이다. 입법회의 의원의 임기는 입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64조 입법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 폐지한다.
2. 구의 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 승인한다.
3. 채택한 법규를 해석한다.
4. 장관으로부터 행정부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5. 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6. 구재판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판사, 지구재판소소장, 판사를 임명, 해임한다.

제65조 입법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분기 1차, 비정기회의는 정기회의 휴회기간에 입법회의 의원 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회의기간은 1년에 100일 이상으로 한다.

제66조 입법회의는 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67조 입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둔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입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68조 입법회의 의장, 부의장은 입법회의에서 선거한다. 의장, 부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입법회의 의원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선거된다.

제69조 입법회의 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입법회의를 사회한다.
2. 입법회의 소집날자를 정하고 공포한다.
3. 입법회의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70조 입법회의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의장이 결원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한다.

제71조 입법회의 의안은 의원들이 제출한다. 장관과 행정부도 입법회의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72조 입법회의는 결정을 낸다. 입법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 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채택된다.

제73조 입법회의는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 1개월 안에 다시 심의한다. 다시 심의하여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에는 입법회의 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채택한다. 이 경우 장관은 의무적으로 동의한다.

제74조 입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은 1개월안으로 최고입법기관에 등록한다. 최고입법기관은 제출된 결정에 대하여 등록하거나 돌려 보내여 수정시킬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돌려 보낸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75조 입법회의 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 받는다. 입법회의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회의 승인없이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

## 제 2 절 장 관

제76조 장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입법기관 앞에 책임진다.

제77조 장관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수 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입법기관이 한다.

제78조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충실할것을 선택한다. 선택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제79조 장관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사업을 지도한다.
2.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며 명령을 낸다.
3. 행정부성원을 임명, 해임한다
4.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5. 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검찰소 부소장, 검사, 지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6. 구경찰국 국장을 임명, 해임한다.
7. 구경찰국 국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경찰국 부국장, 부서책임자, 지구경찰서 서장을 임명, 해임한다.
8. 상장을 제정, 수여한다.
9.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이밖에 제기되는 사업을 한다.

제80조 장관은 입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이 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입법회의에 돌려 보내여 다시 심의하게 할수 있다. 입법회의가 내린 한건의 결정에 대하여 장관은 2 차례까지 돌려 보낼 수 있다.

## 제 3 절 행 정 부

제81조 행정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다.

제82행정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행정부의 부서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  
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이 된다.

제83조 행정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집행사업을 조직한다.
2. 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3.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환경보호 같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하고 집행한다.
4. 주민행정사업을 한다.
5. 사회질서유지사업을 한다.
6. 건설총계획을 작성한다.
7.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한다.
8. 투자유치를 한다.
9. 기업의 창설신청을 심의, 승인한다.
10. 토지이용권, 건물을 등록한다.
11. 세무사업을 한다.
12. 세관검사, 위생, 동식물검역사업을 한다.
13. 하부구조시설물을 관리한다.
14. 소방대책을 세운다.
15. 국가가 위임한 데 따라 대외사무를 처리한다.

제84조 행정부는 지시를 낸다.

#### 제 4 절 검 찰 소

제8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한다.

제86조 검찰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는가를 감시한다.
2. 법이 정한데 따라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 기소를 하며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87조 구검찰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5



년이다.

제88조 지구검찰소 검사의 임명, 해임은 지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 검찰소 소장이 한다.

제89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검찰사업에 대한 지도는 구검찰소가 한다. 지구검찰소는 구검찰소에 복종한다.

제90조 신의주특별행정구 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앞에 책임진다.

### 제 5 절 재 판 소

제9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해당 재판소의 명의로 선고한다.

제92조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한다.
2.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3. 재판활동을 통하여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양한다.
4. 판결, 판정을 집행한다.

제93조 재판은 오직 법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한다. 누구도 재판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제94조 구재판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입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95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경우에 따라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고 재판할수 있다.

제9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특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97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9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재판기관이다.



## 제6장 구 장, 구 기

제99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한다. 구장, 구기 사용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10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장은 원형하늘색선과 흰색으로 된 띠안의 좌우아래부분에 하늘색의 오각별이 그려져 있고 그 윗부분에는 하늘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흰색의 띠로 둘러 막힌 하늘색바탕의 중심에는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원형밑부분과 겹친 하늘색의 띠부분에는 두줄로 <신의주특별행정구>라고 흰색으로 쓰여 있다. 원형 하늘색바탕의 밑부분과 하늘색띠와 겹친 부분에는 흰색선이 있다.

제10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기는 하늘색바탕의 중심에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로 비는 1 : 1.5이다.

## 부 칙

제 1 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 2 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법규제정은 이 법에 엄격히 준하여 한다.

제 4 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II. 남한의 협력 관련 주요 법규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 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994. 12. 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1996. 12. 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 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 이라 한다)과 그 이북 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 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 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 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 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 4 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 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 6 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협의회의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 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 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 〈부칙생략〉



##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 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8호

(교통세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5. 12. 6 대통령령 제14819호

(병역법시행령)

1996. 5. 31 대통령령 제15006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 12. 15 대통령령 제15539호

(우편법시행령)

1998. 10. 23 대통령령 제15920호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5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입장소)**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



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 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준용규정 등)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

제 9 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 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4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4면

④ 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년의 유효기간 범위안에서 횡수의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의 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는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기간) ①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등) ①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삭 제>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 4 장 교 역

### 제25조 〈삭 제〉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이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 제27조 〈삭 제〉

### 제28조 〈삭 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5 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 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 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 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⑤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

**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의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 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생략〉



###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통일부소속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1 조(목 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재외국민 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북한방문신고서 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조(출입신고서 등) 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 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부칙 및 별표·별지 생략〉



#### 4.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0. 9. 25 통일부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부고시 제91-2호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4호  
 1995. 1. 3 통일부고시 제95-1호  
 1996. 3. 5 통일부고시 제96-1호  
 1997. 4. 1 통일부고시 제97-1호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8. 6. 19 통일부고시 제98-2호  
 1999. 8. 16 통일부고시 제99-2호  
 2000. 9. 28 통일부고시 제2000-1호

제 1 조(목 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제 3 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 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신고·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



진필름 및 영화·비디오물을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계기한 품목

② 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제 4 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제 5 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 6 조(반출·반입 승인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양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 반입 승인을 요하는품목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	0102-10-1000	소(종우/젓소)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 절단)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3	0207-12-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미절단)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20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21	0303-79-9093	홍어(냉동)
22	0306-14-3000	게(냉동, 꽃게에 한함.)
23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24	0306-24-1010	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꽃게에 한함.)
25	0307-29-1000	가리비(냉동)
26	0307-49-1020	오징어(냉동)
27	0307-59-1020	낙지(냉동)
28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29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0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31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2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초과)
33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4	0402-91-1000	무당연유
35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36	0402-99-1000	가당연유
37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38	0403-90-1000	버터밀크
39	0404-10-1010	유장분말
40	0404-10-1090	유장(유장분말 이외)
41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42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이외)
43	0409-00-0000	천연꿀
44	0410-00-3000	로얄제리
45	0701-10-0000	감자(종자용)
46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47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48	0703-20-1000	마늘/탈피한 것(신선·냉장)
49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냉장)
50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51	0710-80-2000	마늘(냉동)
52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53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54	0712-20-0000	양파(건조)
55	0712-90-1000	마늘(건조)
56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57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8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59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60	0714-20-1000	고구마(신선)
61	0714-20-2000	고구마(건조)
62	0714-20-3000	고구마(냉장)
63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64	0714-90-9090	서류(기타)
65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66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67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8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69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70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71	0805-20-1000	감귤(신선·건조)
72	0805-20-9000	맨더린류(감귤 이외/신선·건조)
73	0805-90-0000	감귤류(오렌지·맨더린류·레몬·그레이프 푸르트 이외/신선·건조)
74	0810-90-3000	대추(신선)
75	0813-40-2000	대추(건조)
76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3kg이하 포장)
77	0902-20-0000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
78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9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80	0910-10-0000	생강
81	1003-00-1000	맥주맥
82	1003-00-9010	겉보리
83	1003-00-9020	쌀보리
84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85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86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87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88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89	1006-10-0000	벼
90	1006-20-1000	메현미
91	1006-20-2000	찰현미
92	1006-30-1000	맷쌀
93	1006-30-2000	참쌀
94	1006-40-0000	쇄미
95	1007-00-1000	수수(종자용)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96	1008-10-0000	메밀
97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98	1102-30-0000	쌀가루
99	1102-90-1000	보리가루
100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101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102	1103-12-0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103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104	1103-14-0000	쌀(분쇄물 및 조분)
105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06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07	1103-21-0000	밀(펠리트)
108	1103-29-1000	쌀(펠리트)
109	1103-29-2000	보리(펠리트)
110	1103-29-9000	곡물(기타/펠리트)
111	1104-11-0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2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3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14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15	1104-21-0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6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7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18	1104-29-1000	율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19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20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21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22	1107-10-0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23	1107-20-1000	맥아(볶은 것/훈연한 것)
124	1108-11-0000	밀 전분
125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26	1108-13-0000	감자 전분
127	1108-14-0000	매니옥 전분
128	1108-19-1000	고구마 전분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29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30	1108-20-0000	이눌린
131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 용)
132	1201-00-9000	대두(기타)
133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34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5	1207-40-0000	참깨
136	1211-20-1100	수삼
137	1211-20-1210	백삼(본삼)
138	1211-20-1220	백삼(미삼)
139	1211-20-1240	백삼(잡삼)
140	1211-20-1310	홍삼(본삼)
141	1211-20-1320	홍삼(미삼)
142	1211-20-1330	홍삼(잡삼)
143	1211-20-2210	홍삼분
144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5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46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47	1211-20-9200	인삼종자
148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49	1213-00-0000	곡물의 껍과 껍질(벼짚에 한함)
150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51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52	1302-19-1210	홍삼정
153	1302-19-1220	홍삼정분
154	1302-19-1290	홍삼엑스(홍삼정·홍삼정분 이외)
155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6	1702-11-1000	유당
157	1702-19-1000	기타유당
158	1702-90-1000	인조꿀
159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0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61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2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63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4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5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66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7	1902-19-2000	당면
168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제조한 것)
169	2008-11-9000	낙화생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70	2009-30-9000	감귤류주스(단일 감귤류주스/레몬·라임 이외)
171	2103-90-9040	매주
172	2106-90-3021	홍삼차
173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74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75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76	3505-10-3000	배소전분
177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178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79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80	3505-20-1000	전분 글루
181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82	3505-20-9000	기타 글루
183	5004-00-0000	견사
184	9613-1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
185	9613-2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 5.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3. 12. 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1996. 12. 12 법률 제5170호

(재정융자특별회계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

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 5. 24 법률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 12. 31 법률 제6075호(국채법)

제 1 조(목 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 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 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4 조(기금의 자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 5 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삭제 〈 ' 93.12.31〉

제 7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



원

6. 차입금 및 공공기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개정 ' 93.12.31〉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 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부칙 생략〉



## 6.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제 1 조(목 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자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 3 조(채권의 발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 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기금의 지원 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융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 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 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용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생략〉



## 7.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개정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1 조(목 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 보증 또는 손실보조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 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 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예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칙 생략〉



## 8.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 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연형묵



## 9.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 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연형묵



---

북한 수산업 실태와 남북협력사업 발전방안

---

2002年 12月 26日 印刷  
2002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李 廷 旭  
發行人  
發行處 韓 國 海 洋 水 產 開 發 院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

組版・印刷/해항사 393-0836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734-6818